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 민태은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 민태은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인 쇄 2016년 4월
발 행 2016년 4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인 쇄 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ISBN 978-89-8479-838-0 93340
미국 정치, 대통령 후보, 정책 네트워크
340.942-KDC6 / 320.973-DDC23 CIP2016012216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02-734-6818 · 사무실 : 02-394-0337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 | |
|---|-----------|
| 요약 | vii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 3 |
|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 9 |
| II. 2016년 대선 환경 및 후보별 대외정책 입장 분석 | 11 |
| 1. 2016년 미국 대선 국면의 정치환경 | 13 |
| 2. 민주당 주요 경선 후보의 현안별 입장 | 20 |
| 3. 공화당 주요 경선 후보의 현안별 입장 | 38 |
| III. 주요 후보의 정책 네트워크 현황 | 49 |
| 1. 민주당 주요 후보 정책 네트워크 | 51 |
| 2. 공화당 주요 후보 정책 네트워크 | 65 |
| IV. 주요 후보의 의회 내 네트워크 분석 | 71 |
| 1. 민주당 주요 후보 의회 내 네트워크 | 74 |
| 2. 공화당 주요 후보 의회 내 네트워크 | 81 |
| V. 결론 및 정책 제언 | 83 |
| 참고문헌 | 87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91 |

표 목차

Table

| | |
|--|----|
| 〈표 I-1〉 민주·공화당 주요 경선후보 대의원 확보 현황 | 4 |
| 〈표 II-1〉 민주·공화당 경선 토론 주제 순위 | 19 |
| 〈표 IV-1〉 힐러리 클린턴의 공동발의 의원 | 75 |

그림 목차 Figure

- 〈그림 II-1〉 연방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 .. 14
- 〈그림 II-2〉 민주·공화당 유권자별 이념적 분극화 심화 현황 16

후 표

본 연구는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선과정을 분석하여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공약과 그들의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6년 대통령 선거 경선이 치러지는 미국 국내 정치 환경을 분석해보았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는 워싱턴 의회정치의 교착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져온 불만, 그리고 점차 심화되어가는 유권자 및 의회 내부의 이념적 분극화로 인해 이념적으로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추세로 존재해온 권위주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다 현저히 나타남으로써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가장 근접한 공약을 밝힌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로서, 특히 아시아 재균형정책 유지에 대한 그의 공약은 지금의 미중 간 협력과 경쟁, 갈등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 역시 현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지금의 대북제재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는 힐러리 후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회를 포함한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관료와 전문가 그룹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과도 의회에서의 협력경험이 있어 안정적인 대외정책 개진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대외정책은 단순히 인적 구성뿐만이 아니라 향후 실행정부가 직면할 대외전략 환경과 전반적인 실행정부 진용 등 다수의 구조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선 경선은 7월에 예정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까지 두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어떤 후보가 대선 본선 후보로 지명되느냐와 상관

없이 이번 대선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접근법은 한국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지금 한국의 대북정책, 특히 제재국면에서의 대북정책과 이후 통일정책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의견 공유 및 조율 과정이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주제어: 이념적 분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대통령 선거(presidential election), 경선(primaries), 의회(congress), 싱크탱크(think-tank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6년 4월 현재 미국은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당별 경선과정에 있으며, 11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선두 후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대선결과의 파급력은 단순히 미국 내 정치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국이 향후 최소 4년간 어떠한 세계관과 세계전략을 바탕으로 대외관계 및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 국제사회와의 양자·다자적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대선 결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015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로의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것이라는 공약이 선언될 정도로 한미협력의 범위는 이제 북한 문제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기에, 2016년 미국 대선의 향방은 한국의 향후 대외적 위상을 결정하며 이와 관련한 동맹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¹⁾

또한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가 최근 미·중 간 아시아 지역 내 세력전이의 지형 속에서 구조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한국의 외교적 운신의 폭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현 정부가 제시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주요 대선 후보의 현안별 입장을 정리하고 이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형성되는 정책 네트워크 환경을 식별해보고자 한다.

1).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Shared Values, New Frontiers," October 16, 2015,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10/16/joint-fact-sheet-united-states-republic-korea-alliance-shared-values-new>>. (검색일: 2016.3.20.).

2016년 4월 현재, 이미 미국의 당별 경선과정은 중반부에 이르렀으며 2016년 7월 민주·공화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서 각 당 경선 승리후보를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다. 2016년 2월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민주·공화 양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다수가 중도 포기했으며, 현재 양당의 주요 후보로는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Hillary D.R. Clinton), 버니 샌더스(Bernard “Bernie” Sanders)가 있으며 공화당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테드 크루즈(Rafael Edward “Ted” Cruz) 후보가 있다. 2016년 4월 21일 현재 민주·공화 경선 후보의 대의원 확보 현황은 <표 I-1>과 같다.

2016년 4월 21일 이후 6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민주당의 마지막 경선까지, 앞으로 남은 양당의 경선은 코네티컷, 델라웨어, 캘리포니아 주 등 21곳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남은 경선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대의원 수는 민주당의 경우 1,646명, 공화당의 경우 734명이다. 민주당 경선후보의 경우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 대의원 수의 과반인 2,383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며, 공화당 후보 역시 총 대의원 수의 과반인 1,237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보았을 때 민주·공화 각 당의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현재로서는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라고 볼 수 있다.

<표 I-1> 민주·공화당 주요 경선후보 대의원 확보 현황

(2016년 4월 21일 현재)

| 후보 | 민주당 | | 공화당 | |
|------------------------------|---------|--------|---------|--------|
| | 힐러리 클린턴 | 버니 샌더스 | 도널드 트럼프 | 테드 크루즈 |
| 선언대의원 (Pledged Delegates) | 1,428 | 1,151 | 845 | 559 |
| 수퍼대의원 (Superdelegates) | 502 | 38 | - | - |
| 확보 총계 | 1,930 | 1,189 | 845 | 559 |
| 잔여 경선 대의원수 | 1,646 | | 734 | |

출처: 저자 작성.

한편 민주·공화 양당의 경선 후보들은 당별 경선 후보 토론회 혹은 타운홀 미팅 등 유세현장에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물론, 외교안보정책이 경선 과정에서 갖는 우선순위는 높지 않아 아직 이에 대해 후보별로 체계적인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예컨대 최근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진 미국 유권자들의 주요 현안은 1)경제(17%), 2)연방정부 기능마비(dysfunction)(15%), 3)실업(11%), 4)이민(8%), 5)건강보험(8%), 6)인종갈등(6%), 7)테러리즘(6%)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²⁾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이후 파리기후 변화협정 체결, 이란 핵협상 타결, 쿠바 국교정상화 등의 많은 대외적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축소(retrenchment)적 외교정책을 수행하였기에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신뢰도를 낮춤과 동시에 적들로 하여금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이 약화되었다며 국내적으로 비난받아온 바 있다.³⁾ 이는 공화당으로 하여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들에 대해 ‘국방정책이 유약하다(soft on defense)’는 고질적 비난을 재개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주요 후보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언급되거

2) Gallup, “Presidential Election 2016: Key Indicators,” 2016.3.2~6, <<http://www.gallup.com/poll/189299/presidential-election-2016-key-indicators.aspx>>. (검색일: 2016.3.20.).

3) Jeffrey Goldberg, “The Obama Doctrine,” *The Atlantic*, April 2016,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6/04/the-obama-doctrine/471525/>>. (검색일: 2016.3.20.); Alexander Bernard, “Recovering from the Obama Doctrine,” *The National Interest*, March 10, 2016, <<http://nationalinterest.org/feature/recovering-the-obama-doctrine-15461>>. (검색일: 2016.3.20.); Rosa Brooks, “Obama: The Last Year and the Legacy, Part I, II” *Foreign Policy*,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2/25/obama-the-last-year-and-the-legacy-part-ii/>>. (검색일: 2016.3.20.); Michael O’Hanron, “Obama the Carpenter: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Legacy,” *The Brookings*, May 2015, <<http://www.brookings.edu/research/reports/2015/05/obama-carpenter-national-security-legacy-ohanlon>>. (검색일: 2016.3.20.).

나 강조된 외교안보 현안은 중국, 이란, 러시아, 쿠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 군비태세, 에너지 및 기후변화, 이민, 대외무역 등 다양하지만, 민주·공화당별로 강조되는 현안이 다르다. 즉, 공화당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적 유약성을 강조할 수 있는 현안들을 논의한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오히려 대외정책 현안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반도 문제의 경우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의 미국 선거에 비해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주요 후보들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 평화통일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특히 비핵화를 위한 해법으로서의 제재조치에 집중케 하였다. 다만 민주·공화 양당 주요 후보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반면 그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비록 7월에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전당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미국 경선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후보들의 세계관과 세계전략, 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식별과 조율은 지금의 대북 제재국면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018년 2월 24일까지인 반면 미국의 신정부는 2017년 1월 20일 취임식이 거행되므로, 한국은 장기적으로 지금의 제재국면 모멘텀이 일관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민주·공화 주요 후보들에게 북한 비핵화전략 및 통일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이들의 동북아 전략형성 구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요 후보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싱크탱크(think tanks)뿐만이 아니라 정책이 공식적으

로 법제화되는 의회 내 상하원 개별 의원 및 각종 위원회도 포함한 네트워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싱크탱크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 정책학, 행정학 등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카네기 평화연구소(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후버 연구소(Hoover Institute), 그리고 미국외교협회(Council for Foreign Relations)가 1차대전 직후 최초의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로 설립된 이후,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급격히 싱크탱크의 수가 증가해왔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어왔다. 싱크탱크가 미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갖는 위상과 영향력의 수준은 행정부별로 부침을 겪어왔으나,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기간 혹은 행정부 교체기 동안의 정책결정자들과 싱크탱크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⁴⁾

4) 미국 내 싱크탱크의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일반적으로 1)엘리트 집단으로서의 싱크탱크, 2)다원주의적(pluralist) 관점에서 여타 이익단체 혹은 비정부기구와 마찬가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싱크탱크, 3)백악관과 국무부가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이들의 의향에 의해서만 싱크탱크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국가주의적(statist) 접근법, 4)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혹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속에 존재하는 행위자 가운데 하나로 싱크탱크를 인식하는 제도주의적(institutionalist) 접근법, 이렇게 네 가지로 유형화되어왔다(Diane Stone, *Capturing the Political Imagination: Think Tanks and the Policy Process* (London: Frank Cass, 1996), pp. 26~37). 엘리트 관점에 따르면 싱크탱크는 국가권력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외교안보정책과 국방정책 관련 문헌에서 빈번히 관찰된다(James G. McGann, and Erik C. Johnson, *Comparative Think Tanks, Politics and Public Policy* (London: Edward Elgar Publishing, 2006), pp. 11~18). 한편 다원주의적 관점은 싱크탱크가 여러 단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다원주의 관점에서의 정부의 정책이란 여러 행위자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집단적 산물(collective outcome)이다. 국가주의적 접근법은 기존의 현실주의적 이론과 일맥상통하며(Stephen D. Krasner,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 Investment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pp. 5~34), 제도주의적 접근법은 정부 정책결정자들과 인식공동체들 간의 정책 논의와 숙고를 통해 정책이 형성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접근법과는

또한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기간 혹은 행정부 교체기에 대선 후보가 싱크탱크에 더욱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관찰되어왔다. 이는 싱크탱크에 소속되어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 전 고위급 관료 혹은 저널리스트, 기업인, 학자 등 - 후보에게 다양한 선거정책 및 현안들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는 선거공약을 제시할 수 있고, 워싱턴 정치 맥락에 적합한 선거 전략에 대해 조언하며,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드보커시 싱크탱크(advocacy think tank)와 같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싱크탱크의 경우는 이들과 가까운 이념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내건 공약의 타당성을 입증(validation)함으로써 지지층을 동원할 수 있다.⁵⁾ 그러므로 대선 후보들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네트워크 분석은 후보들의 이념적 정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약제시, 그리고 유권자 접근 전략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싱크탱크에 포함된 전문가들이 당선 이후 행정부 교체기에 행정부에서 관료로서 입각할 가능성도 있기에, 이들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전략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선 후보자가 갖는 의회 내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은 의회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미 헌법은 명시적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나누고 있다. 의회의 경우 결의안(resolution) 혹은 정책성명서

달리 정책은 정부와 인식공동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Donald E. Abelson, *A Capitol Idea: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6), pp. 101~108; Howard J. Wiarda, *Think Tanks and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Presidential Politics* (Lanham, MD: Lexington Books, 2010), pp. 29~31).

⁵⁾ Donald E. Abelson, and Christine M. Carberry, "Policy Experts in Presidential Campaigns: A Model of Think Tank Recruitment,"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27, No. 4 (1997), pp. 679~697.

(policy statement), 법안(legislature) 작성, 그리고 예산조정 및 예산안 처리를 통해 외교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친다.⁶⁾ 그러므로 입법 과정에서 특정 대선 후보가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념적 입장을 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후보의 정책성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법안발의(sponsorship)나 공동발의(co-sponsorship) 참여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과의 의회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의원들의 법안발의 주요 동기는 상하원의 주요 위원회 배정 및 재선을 위해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를 실현하고, 해당 지역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동발의 행위는 특정 의원의 정책선호와 더불어 의회 내 네트워크를 나타낸다. 따라서 주요 후보들의 공동발의 참여를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의회 내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⁷⁾ 나아가 이러한 대선 후보의 의회 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것은 해당 후보의 이념적 입장과 향후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

2. 연구의 범위와 목적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고, 이들의 정책이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그

6). James M. Lindsay,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S Foreign Poli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pp. 12~14; David P. Auerswald, and Colton C. Campbell,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 Secur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9~10.

7). Jonathan Woon, "Bill Sponsorship in Congress: The Moderating Effect of Agenda Positions on Legislative Proposals,"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1 (2008), pp. 201~216; James H. Fowler,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in the US House and Senate," *Social Networks*, Vol. 28 (2006), pp. 454~465.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이 네 후보를 중심으로 이들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의회 내에서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각 후보의 정책입장을 분석한다. 주요 현안의 유형을 크게 1)외교안보, 2)경제, 3)이민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외교안보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미중관계를 포함한 아시아 정책 및 동맹정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또한 현재까지 공개된 이들 주요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자문기들을 분석하여, 각 후보의 싱크탱크 네트워크 및 정책 입장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후보의 의회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연방의회 의원으로 이들이 발의(sponsorship) 및 공동발의(co-sponsorship)자로 참여하여 법으로 제정된 법안을 분석하고,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 미 대선 경선평정에 있는 주요 후보들의 대외 정책 관련 입장과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확인하여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우리의 전략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주요 후보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정책 입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2016년 대선 환경 및 후보별 대외정책 입장 분석

1. 2016년 미국 대선 국면의 정치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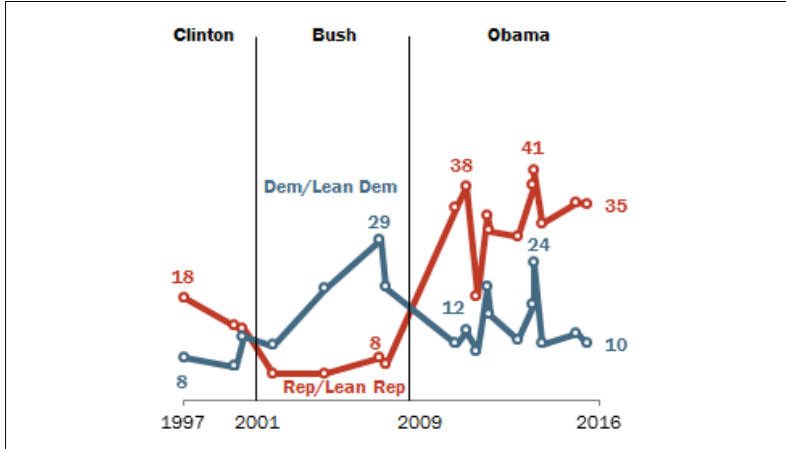
이번 2016년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웃사이드(outsider) 후보의 선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2016년 미국 대선의 주요 후보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의 잭 부시(John Ellis “Jeb” Bush) 후보가 각 당의 전형적인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경선 국면에 접어들자 각 정당에서의 ‘비전통적’ 후보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높아졌으며, 이는 오히려 ‘전통적’ 혹은 ‘전형적’인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즉, 기존의 정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했다는 불만을 비전통적 후보들이 대중융합적 선거 레토릭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들의 선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아웃사이드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이미 정치에 입문하기 전 유명인사(celebrity)로서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기존 정치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쇼맨십 혹은 무례한 태도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단적으로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 프로그램의 시청률 역시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분석되어왔다.

그렇다면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이 중도적 성향을 가진 준비된(established) 후보자보다는 비전통적 후보들에게 표를 던지는 데에는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해 기존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선택지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림 II-1〉 연방정부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 비율

(붉은 선: 공화당 지지자, 파란 선: 민주당 지지자)



출처: Pew Research Center, “Campaign Exposes Fissures over Issues, Values and How Life Has Changed in the US,” March 2016, <<http://www.people-press.org/2016/03/31/1-views-of-the-primaries-pres-s-coverage-of-candidates-attitudes-about-government-and-the-country>>. (검색일: 2016.3.20.).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66%가 미국인의 생활이 50년 전보다도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75%가, 크루즈 후보의 지지자들 가운데에서는 65%가 미국인의 생활이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48%는 오히려 미국인의 생활이 50년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클린턴 지지자들의 경우는 53%가, 샌더스 지지자들은 45%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⁸⁾ 이는 유권자의 이념적 정향에 따라 각자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혹은 더욱 구체적으로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⁸⁾ Pew Research Center, “Campaign Exposes Fissures over Issues, Values and How Life Has Changed in the US,” March 2016.

마찬가지로 <그림 II-1>의 결과에서 확인되듯, 공화당 지지자들은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고, 민주·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67%가 정치 자체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1)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25%), 2)의회 내 교착상태 혹은 무능력(18%), 3)정치인과 유권자들 간의 소통 부재(15%) 등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워싱턴에 이미 자리 잡아온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로이 등장한 후보, 즉 기존의 정치체제에 속하지 않은 트럼프 후보나 샌더스 후보의 약진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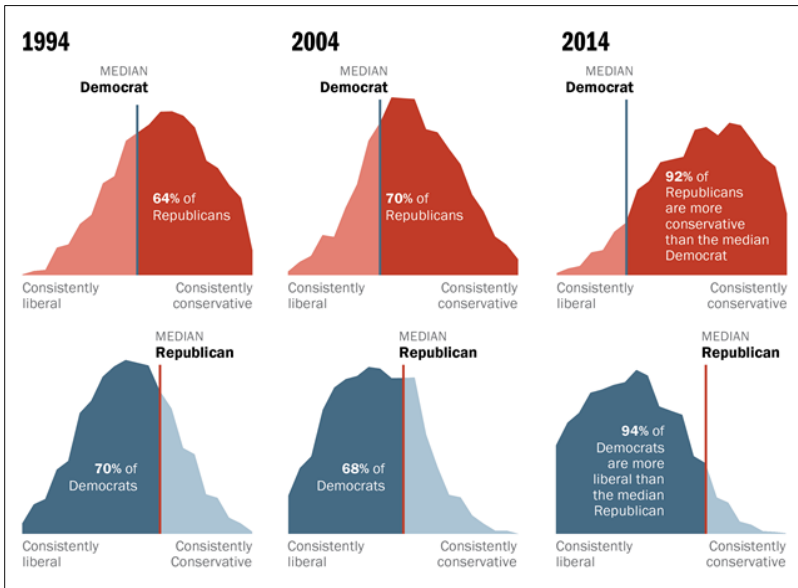
아우사이더 후보들의 약진을 설명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안은 바로 유권자들 사이의 심화되는 이념적 분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소위 ‘중위자 투표모형(median voter theorem)’에 따라 주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분석되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중위자 투표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유권자 선호의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경선에서 극단적인 이념적 정향을 지닌 민주·공화 각 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림 II-2>에 나타나듯 미국의 유권자들의 이념적 정향이 분극화되어 점점 양극단으로 이동하는 상황과 맞물려있다.⁹⁾

더욱이 경선의 경우, 1968년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McGovern-Fraser Commission, Commission on Party Structure and Delegate Selection)에 의해 프라이머리(primary, 국민경선방식)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코커스(caucus)와 새로 도입한 프라이머리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공

⁹⁾ James A. Thurber, and Antoine Yoshinaka. *American Gridlock: The Sources, Character, and Impact of Political Polar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3~4.

개되었는데, 이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일반적인 유권자들과는 달리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도 강하며, 이슈활동가일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념적으로 일반 유권자들보다는 상당히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으로 극단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선과정에서의 이념적 분극화는 실제 대선에서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나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 혹은 존 케이식(John Kasich) 같은 각 당의 ‘정통’ 후보들과는 달리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나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극단적인 이념성향 혹은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의 약진이 경선과정에서 두드러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2〉 민주당·공화당 유권자별 이념적 분극화 심화 현황



출처: Pew Research Center,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June 2014, (<http://www.people-press.org/2014/06/12/political-polarization-in-the-american-public/>). (검색일: 2016.3.20.)

물론 실제 본선에서는 ‘경선후 중도층 끌어안기(post-primary moderation)’가 일어날 수 있으나, 유권자들 사이의 심화되는 이념적 분극화와 낮은 투표율은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당파적 유권자(partisan voter)들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이 본선 과정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후보들 가운데 특히 트럼프 후보의 약진을 설명하는 데 있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부상이라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이때의 권위주의란 유권자 개개인이 가진 성향(personality) 혹은 세계관(world view)으로서, 전통적 의미의 사회 질서를 옹호하고 이러한 전통적 사회질서에 위협이 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challenge)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향을 일컫는다.¹⁰⁾

특히 유권자가 지닌 권위주의적 성향과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식은 상호 작용한다고 분석된다. 유권자가 사회규범의 변화 혹은 테러리즘과 같은 외부의 변화를 위협(threat)으로 인식할 경우 유권자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위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관찰되어온 것이다.¹¹⁾ 예컨대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의 위협 인식이 잦아들고 있었던 2008년 대선을 희망과 공포(hope and fear)로 프레임한 오바마의 선거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또한 매우 성공적이었다.

한편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는 소수집단·성적 소수자, 이민자, 무슬림, 유대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소

¹⁰⁾ Marc J. Hetherington, and Jonathan Weiler, *Authoritarianism &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33~34.

¹¹⁾ *Ibid.*, pp. 132~133.

수집단이 전통적인 규범적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주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세심한(nuanced) 접근보다는 흑백논리의 단순한 접근을 선호하게 한다.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성향은 갈등해결에 있어서 매파적(hawkish) 정책을 선호하게 되는데, 예컨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주의적 유권자들은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중심 문제해결 접근법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은 권위주의적 성향의 정치인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이 특히 트럼프의 부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한편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권위주의는 공화당의 ‘보수주의(conservatism)’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권위주의는 차이와 변화를 용인하지 않는 편협성(intolerance on difference)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보수주의는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에 있어 두 개념이 유사하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보수주의는 훨씬 큰 범주와 다양한 영역, 예컨대 자유방위주의나 작은 정부 지향 등의 정책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또한 권위주의적 유권자들은 공화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권위주의적 유권자들의 차별성은 교육, 소득수준, 성별, 종교 등 일반적으로 민주·공화당 지지자들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균열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¹²⁾ 그러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옹호하는 공화당의 오랜 정강은 권위주의적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화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한 공화당의 정책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향은 경선과정에서 등장하는 논쟁적 현안들을 권

¹²⁾ Ibid., p. 39.

위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지금의 이념적 분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적 의제선정과 정당 간 경쟁을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표 II-1>에서 제시된 것은 이제까지 진행된 민주·공화 각 당의 경선 후보토론회에서 논의된 토론 주제들로서, 공화당의 경우 이민이나 테러리즘 등 미국사회가 대내외적으로 마주한 ‘위협’에 대해 논의한 반면, 민주당의 경우 미국시민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마주한 국내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민주·공화당 경선 토론 주제 순위

| 민주당 토론 | 공화당 토론 |
|--------|------------------------|
| 건강보험 |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
| 취업 | 이민 |
| 총기사용 | 세금 |
| 교육 | 군사력 |
| 지상군 파병 | 이란 |
| 형사법제도 | 반 워싱턴(Anti-Washington) |
| 시리아 | 재정적자 |
| 러시아 | 지상군 파병 |
| 인종 | 레이건 대통령 |
| 월 스트리트 | 러시아 |

출처: Josh Keller and Karen Yourish, "Which Issues Each Party Debates, or Ignores," *The New York Times*, March 10, 2016.

요컨대 2016년 미국 대선이 위치한 정치환경은 기존의 정치적 균열선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유권자의 이념적 분극화와 권위주의적 유권자 등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며 극단적 이념 성향의 후보자가 선전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

히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로 미국 국내정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미국 의회정치의 교착상태(gridlock)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2. 민주당 주요 경선 후보의 현안별 입장

현재 민주당의 주요 경선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이다. 이들은 각각 기성(established) 후보이자 아웃사이드 후보로, 특히 샌더스 후보의 대외정책 공약은 민주당의 정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¹³⁾

비교를 위해 우선 민주당의 대외정책 정강을 먼저 살펴보면¹⁴⁾ 현재 민주당의 대외정책 노선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시기 미국의 대외환경, 즉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중동 및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방주의에 기초한 군사적 접근방식을 지양하며 다자주의 외교를 포함한 3D(defense, diplomacy, development) 접근법을 통해 대외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테러, 기후변화, 초국경 범죄 등 미국의 역량만으

¹³⁾ Max Fisher, "Clinton and Sanders Finally Had a Real Foreign Policy Debate. Here's What We Learned," *Vox*, February 12, 2016, <www.vox.com/2016/2/12/10978812/hillary-clinton-bernie-sanders-foreign-policy>. (검색일: 2016.3.15.);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미국진보센터(www.americanprogress.org), 미 국무부(www.state.gov), 전략국제센터(www.csis.org), The Washington Post(www.washingtonpost.com) 웹사이트 참조.

¹⁴⁾ 민주당의 대외정책 정강은 다음의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www.democrats.org/party-platform>. (검색일: 2016.4.12.).

로는 대응할 수 없는 성격의 안보위협 증가에 기인한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상황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다자적 해결, 즉 국제제도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재균형(rebalancing)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량을 아시아 지역에 보다 더 투입하는 소위 ‘아시아로의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균형 전략은 미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중국의 역내 확장 견제, 중국의 확장으로 불안해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재보장(reassurance) 및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동기가 재균형 전략 내에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현안 순서는 1)이라크 전쟁 이후 역내외 파트너십 강화, 2)알카에다 소탕, 3)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4)핵비확산, 5)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사이버안보, 생물무기, 기후변화, 초국경 범죄), 6)동맹 강화 및 국제제도 활용, 7)글로벌 차원의 번영과 발전 도모, 8)군사력 우위 유지, 9)보편적 가치 추구이다. 이와 같은 민주당 외교안보정책 정강의 내용과 우선순위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와 미국의 리더십 발휘 방향, 대외위협인식, 대응전략의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국방부, 국무부의 인사들은 미국의 국력이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으며, 무형이지만 잠재적으로(intangible but potent)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재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미국의 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역량은 매우 크지만, 무한대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¹⁵⁾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바마는 스스로의 대외정책을 고립주의(isolationism)는 아니지만, 현실주의(realism)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¹⁶⁾ 즉, 다자기구와 국제규범 강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미국이 단독으로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문제를 미국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미국이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현실주의적 자제(realist-driven restraint)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바마는 다자주의적 해결방식은 미국의 부담을 국제사회와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일방주의와 자만심(hubris)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⁷⁾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축소(retrenchment)의 대외정책의 배경에 대해서 오바마의 집권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 시민들이 지쳐가는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따라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¹⁸⁾ 더욱이 모든 강대국들이 과도한 확장(overstretch)으로 인해 국력 손실이라는 문제를 겪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축소정책은 미국의 쇠퇴라기보다,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¹⁹⁾

15)- Goldberg, "The Obama Doctrine."

16)- *Ibid*.

17)- *Ibid*.

18)- Stephen Sestanovich, *Maximalist* (New York: Vintage Books, 2014), p. 302.

19)- Goldberg, "The Obama Doctrine."

현안별 우선순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문제와 더불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에 있었다고 분석된다. 특히 중동은 미국 내 셰일가스 발견으로 인해 그 경제적 중요도는 낮아졌지만 테러리즘 확산으로 인해 미국이 계속 주시하는 지역이다. 또한 강대국간 전통안보 현안보다는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현안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선순위들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쌓기(legacy building)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주요 현안별 입장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민주당 상대후보 샌더스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인 대외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이 클린턴 후보의 큰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⁰⁾ 세간에는 클린턴 후보의 선거공약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보다 강경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왔으나,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 이민정책 기초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²¹⁾

(1) 기본 정책 입장

힐러리 후보가 상정하는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과 외교적 영향력, 그리고 군사력의 근간은 바로 경제력에 있다는 관점 하에 ‘미국의 기초

20) Molly O’Toole, “Clinton’s Trying to Use Foreign Policy to Beat Sanders,” *Foreign Policy*, January 31,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1/31/clintons-trying-to-use-foreign-policy-to-beat-sanders/>>. (검색일: 2016.3.15.).

21) Stephen Walt, “The Big 5 and the Sad State of Foreign Policy in 2016,” *Foreign Policy*, February 2,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2/02/the-big-5-and-the-sad-state-of-foreign-policy-in-2016-sanders-clinton-trump-cruz-rubio/>>. (검색일: 2016.2.18.).

(foundation),’ 즉 교육, 인프라, 기술력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투자를 강조하고 시장경제 확산과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²²⁾ 이는 지난 경기 침체로부터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리더십은 단순히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중첩적으로 존재한다는 힐러리 후보의 인식을 보여 준다.

또한 미국이 당면한 가장 근접한 대외적 위협인 테러리즘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였다.²³⁾ 더욱이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경력을 밝히며 힐러리 후보는 미국의 군비태세를 쇄신하고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언제나 대응토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 왔다. 또한 힐러리 후보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이러한 경성안보(hard security)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이 기초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특히 성 소수자평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에게 보장한다는 비전도 제시한 바 있다.

요컨대 힐러리 후보는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유지케 하는 권력의 원천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있어 현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하고, 또한 테러리즘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방 분야에서의 경력과 우선순위를 강조함으로써 여성 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지움과 동시에 최고 사령관(commander-in-chief)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22) 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식 선거 홈페이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분야, <www.hillaryclinton.com/issues/national-security/>. (검색일: 2016.4.12.).

23) *Ibid.*

(2) 대외정책 접근법

힐러리 후보의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 실현에 동맹국들과 군사적 협력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다자적 문제해결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3D 접근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이 필요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제고와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들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관여정책을 강조한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위로부터의 민주화’보다는 해당 국가의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생적 민주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확산을 예방 및 억지하며 자유세계를 확장시킴으로써 그 자체로 미국의 커다란 대외정책 자산으로 기능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3) 아시아 정책

힐러리 후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체제강화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찬성한다.

한편 힐러리 후보의 대중국 정책공약은 우선 중국의 평화로운 굴기를 환영한다는 것이고, 국무부 장관시절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개최했던 것과 같이 미중 간 경제적 협력 증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²⁴⁾ 다만 중국의 군사력 제고 및 남중국해 현상변경 행위와 같은 공격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²⁴⁾- Catherine Putz, "What Might a Hillary Clinton Presidency Mean for Asia?," *The Diplomat*, April 13, 2015, <<http://thediplomat.com/2015/04/what-might-a-hillary-clinton-presidency-mean-for-asia/>>. (검색일: 2016.3.30.).

즉, 항행의 자유 및 아시아 해양 접근성 보장 문제에 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또한 중국이 사이버안보, 영토분쟁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현안에서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힐러리 후보는 지난 부시 행정부 당시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뚜렷한 언급이 없다.

대러시아 전략의 경우 힐러리 후보는 주변 동맹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원유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가 개진하는 유럽 및 그 밖에 지역에서의 공격적인 현상변경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지난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및 실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는 후술할 샌더스 후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⁵⁾ 또한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중동 정책

중동정책의 경우, 힐러리 후보는 이란과의 적극적인 외교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이란과의 핵무기 협정을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란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동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²⁶⁾

25). "Clinton's Asia Adviser Talks on Future Policies," *Korea Joongang Daily*, March 5, 2016,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15828>>. (검색일: 2016.3.31.).

26). Nathan Guttman, "Who has Hillary Clinton's Ear on Israel and What about Bernie Sanders?," *Forward*, January 25, 2016, <<http://forward.com/news/331166/who-has-hillary-clintons-ear-on-israel-and-what-about-bernie-sanders/>>. (검색일: 2016.3.28.).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ISIL을 봉쇄(containment)하는 소극적인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ISIL을 비롯한 테러리즘 퇴치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5) 경제 정책

힐러리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 및 복지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대외무역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대선후보로서 특정 무역협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1992년 체결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을 지지했으나, 현재는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 손실을 가져온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무장관 재직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공식 지지했으나, 2015년 10월 TPP가 공식 체결되자 미국에 일자리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당선 후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나 개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 금융정책 및 일자리와 관련해, 힐러리 후보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금제도 개혁 및 최상위 계층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 계획을 밝혔으며, 근로자 계층 및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감세 및 인금인상 공약, 그 외에도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업이 수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것과 노조활동을 장려하고,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인상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태양열과 같은 클린에너지, 과학 및 의학연구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발표한 금융선진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바탕으로 은행 개혁을 지속하고, 특히 금융기

관들이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힐러리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보완한다는 입장이 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저소득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의 내용을 보강하고 보다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6) 이민 정책

힐러리 후보는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경선 이전의 이민자 관리와 추방에 대해 취했던 다소 강경한 입장에서 온건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우선 힐러리 후보는 2015년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공식 발언하며, 대신 등록증이 없는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되어온 미성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민정책, 일명 ‘꿈의 법안’인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DACA)’를 지지하며, 구체적으로 DREAMers(미국에서 자란 등록되지 않은 젊은 이민자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민자들의 등록증이 없는 부모, 그리고 영주권자와 같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추방구제 행정명령 ‘꿈의 법안(DACA)’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을 다른 배려가 필요한 이민자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힐러리는 이민정책을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문제(family issue)로 프레임하고 있다. 가족구성원 중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지내는 다른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추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합법적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면 강제로 추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절박한 이유로 미국에 온 사람들을 감금하는 시설인 가족구류센터(family detention)를 없애고, 대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석방하여 관리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힐러리 후보는 대선 경선 시작 전에 난민 어린이(refugee children)와 달리 경제적 이유로 부모 동반 없이 국경을 넘는 어린이(unaccompanied migrant children)는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대선 경선 전에는 등록증이 없는 이민자를 기소하지 않는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sanctuary city)에서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였으나, 대선 경선에 들어서 는 이러한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더 불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이민자관리에는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거주하는 합법 혹은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에 대해서는 포용적 자세이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또는 불법을 저지르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주요 현안별 입장

(1) 기본 정책 입장

샌더스 후보는 국내외 현안들을 보는데 있어 국내문제 vs. 국제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 vs. 경제문제라는 두 가지 큰 틀로 구분하여 이해하며 이에 따른 자신의 정책계획과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시적 시각 모두 기본적으로 경제 불평등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경제 불평등을 현재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²⁷⁾ 실제로 샌더스 캠프가 밝힌 26개 정책이슈 중 24개가 미국의 경제구조,

일자리, 복지, 세금 등의 경제이슈이다. 다시 말해, 샌더스는 지금의 경제 불평등을 가져온 원인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국내외적 정책구상의 기본 방향으로 상정하였으며, 현 미국의 경제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증세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그러나 샌더스 후보가 경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집중한 결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책제안과 대안이 국내 문제에 치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 이민, 정치정책 모두 비용과 이익(cost and benefit) 분석을 통해 미국의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미국의 전통적 평등주의(egalitarianism)를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대외정책 접근법

힐러리 후보에 비해 명확한 외교안보정책 공약 제시가 없어, 샌더스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 외의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다.²⁹⁾ 다만 샌더스 후보는 공정무역 증진, 지구적 환경문제 제기, 인도적 지원 및 대외원조, 인권보호 및 법치를 통해 미국의 연성권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외국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군사적 행동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보다 외교력과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제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

27). Paul Krugman, "Plutocrats and Prejudice," *The New York Times*, January 29, 2016, <www.nytimes.com/2016/01/29/opinion/plutocrats-and-prejudice.html>. (검색일: 2016.3.30.).

28). 버니 샌더스 후보의 공식 선거 홈페이지 참고 <<https://berniesanders.com>>. (검색일: 2016.3.14.).

29). Jeff Stein, "On Foreign Policy, Sanders May Disappoint Devotees," *Newsweek*, February 1, 2016, <www.newsweek.com/2016/02/19/bernie-sanders-foreign-policy-disappoint-devotees-421508.html>. (검색일: 2016.4.1.).

을 피력한 바 있다.³⁰⁾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자제(restraint)의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고 분석되어왔다. 실제로 샌더스 후보는 국회 하원 및 상원의원 시절 제1차 걸프전, 부시 행정부의 대이라크전에 반대했었다. 단, 와인버거-파월 독트린에서와 같이 분명한 목표가 있을 시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력행동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힐러리 후보가 상원의원 시절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ISIL과 알카에다 문제는 전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라크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샌더스 후보는 테러리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나 그 전략에 있어 미국이 주도적으로 경찰국가 역할을 하는 대신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샌더스 후보는, 외교정책 목표는 변화하는 세계국제환경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가능하다는 외교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국제분쟁해결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 방향은 미군의 단독 개입보다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개입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 후보는 동맹 강화 및 동맹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외교정책 방향을 실현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샌더스 후보는 국방비 증강 자체에 반대한다는 언급은 없으나 핵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경제회복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³⁰⁾- Lawrence Korb, "Bernie Sanders is more Serious on Foreign Policy Than You Think," *Politico*, February 11, 2016, <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6/02/bernie-sanders-foreign-policy-213619>. (검색일: 2016.3.23.).

또한 강도 높은 사찰이나 정보수집 및 고문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미국적 가치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을 금할 것이며 국가정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했던 대로 관타나모 베이 구치소(Guantanamo Bay detention center)를 폐쇄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3) 중동 정책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당사국들이 서로 양보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할 뿐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란 핵협상과 관련해, 샌더스 후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이 공동으로 맺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이라크 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대치되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샌더스 후보가 강압적 해결방식이 아닌 외교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나, 구체적인 중동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4) 아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샌더스 후보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미국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국의 허술한 환경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 역시 중국으로부터의 미국 경제보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이 환경시설과 제도

를 갖추지 않음으로 생산비용이 낮아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고, 반면 중국은 낮은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저가 물건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미국 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샌더스 후보의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샌더스 후보는 북한이 이란 혹은 러시아보다 더 위험한 국가라고 지적하며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이 중국의 역할에 기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샌더스 후보는 지난 2월 10일에 시행된 미국 상원 대북제재강화법안(H.R. 757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통과를 위한 투표시기를 놓쳤다. 이는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후보가 투표를 위해 잠시 선거캠프를 떠났던 것과 대비되는 사례라 평가되고 있다.

(5) 경제 정책

샌더스 후보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2.1%에서 5.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사회기반시설확충, 무상교육, 퇴직연금확보,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 밝히고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약속하였다.³¹⁾

대외무역과 관련해, 샌더스 후보는 미국이 해외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현재의 무역정책을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현재의 미국 무역정책이 미국 내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화

³¹⁾ Tim Worstall, "Bernie's Favorite Economist Predicts Lovely Things From Bernie's Economic Plan," *Forbes*, February 9, 2016, <www.forbes.com/sites/timworstall/2016/02/09/bernie-s-favorite-economist-predicts-lovely-things-from-bernie-s-economic-plans/#648c4d8b3f8e>. (검색일: 2016.3.23.).

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 아세안자유무역협정(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CAFTA),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에게 영구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부여한 것이 미국 내 임금하락과 실업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힐러리와 마찬가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일자리 손실을 가져오는 협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금·금융정책 및 일자리와 관련해, 샌더스 후보는 부유한 대기업들에게 공정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 공약하였다. 또한 대기업들이 소득세를 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기업과 일자리를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예컨대 대기업의 해외도피자금에 대해 21조(trillion) 달러를 과세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대형은행을 소규모 화하고, 이들의 위험성 높은 사업운영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노스다코타 은행(Bank of North Dakota)과 같은 공공은행(public bank)을 확대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월가(Wall Streets)의 투자(speculation)에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부과하여 세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현재의 7.25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며(힐러리 후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 공약), 청년일자리프로그램에 55억 달러를 투자하여 소외계층 젊은이들에게 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또한 공립대학교(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학비 및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각종 비용의 무료화를 공약하였다. 또한 철도, 다리, 공항, 댐, 대중교통과 같은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샌더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자세 및 일자리 창출계획은 대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협조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공약을 실천할 기업들과의 공조방안이나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의료보험의 경우, 현 의료보험체제를 수정 및 보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1,900만 미국인이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지만 여전히 3,000만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보험을 국민의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적용을 공약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즉, 국가와 사기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체계를 정부로 단일화하여 정부가 관리하고, 이를 위해 약 15조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확보를 위해 세금을 올리기보다 공공 연금(social security)처럼 급여에서 급여소득세 형식으로 원천징수할 계획을 밝혔다.

(6) 이민 정책

샌더스 후보의 경우 오바마의 이민정책의 유지·확대할 것을 밝혔다. 샌더스는 하원의원 시절 반이민 정책으로 국경지대에 민간인 야간경비대를 배치하는 내용의 ‘Minutemen’ 법안(혹은 Sensenbrenner Bill, H.R.4437 Border Protection, Anti-terrorism and Illegal Immigration Control Act of 2005)에 찬성하였다. 또한 공화당원들이 추진했던 이민자들의 무기한 감금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도 지지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서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온 이민자 자녀들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획득을 위한 방안으로 오바마가 시행한 행정명령인 ‘드림법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DACA)’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또한 드림법안의 확대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때, 또는 자녀가 DREAMers일 때 최소 5년간 추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대선 경선 시작 전인 지난 해 2015년 11월,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면 100일 안에 일정 조건을 갖춘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대통령 행정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민자들이 ‘Affordable Care Act’ 법안을 근거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힐러리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미에서 망명을 위해 국경을 건너온 가족들을 구금하는 가족구금센터(family detention centers)를 폐쇄할 계획이며, 민간 구금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위해 징벌적 이민법안과 집행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지역, 주 및 연방차원에서 이들 민간 기업들과 구금시설 관련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불법이민자나 망명신청자들이 구금되어 있는 시설의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를 고용하고 체류신분을 약점으로 노동법규를 위반한 직장이나 업장의 고용주를 고발하면 내부 고발자비자(whistleblower visa)를 발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공약과 한반도 상황에서의 함의

힐러리 후보의 대외정책은 민주당의 정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힐러리 후보는 대외 개입정책에 대해 오바마보다는 적극적이며 이로 인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liberal internationalist)라고

유형화된 바 있다.³²⁾ 반면 샌더스 후보는 힐러리 후보에 비해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접근법을 강조하는데, 즉 연성 권력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정책 추진과 전통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미국이 과도한 확장(overstretch)을 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힐러리 후보의 경우 국무장관 시절 소위 ‘전략적 인내’ 접근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talk)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금은 전략적 인내의 접근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야 하며 이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 힐러리 후보의 대북접근법은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힐러리 후보의 대아시아 정책 역시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지금의 미중 간 협력과 경쟁, 갈등의 지형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관계에 있어 인권현안을 제기함으로써 경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다른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샌더스 후보 역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제재법안 상원표결과정에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거나 혹은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예상도 가능하다.

또한 샌더스 후보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미중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미중관계 속의 한국의 운신의 폭은 지금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Ibid.

3. 공화당 주요 경선 후보의 현안별 입장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의 선두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이다. 두 후보 모두 기성(established) 공화당 후보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켈 부시와 크리스 크리스티, 린지 그레이엄과 같은 정통 공화당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사퇴하였다.

우선 테드 크루즈의 경우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기독교 보수주의적(Christian conservative)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도 주류 후보는 아니었으며, 당 내에서의 이념적 성향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원이 아님에도 2015년 6월 16일 공화당 대통령 경선과정 참여를 선언하며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양 후보의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공화당의 대외정책 정강과 많은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공화당의 대외정책 정강을 살펴보면,³³⁾ 공화당의 대외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레이건 행정부 이후 공화당의 전통적 모토로 자리잡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내러티브와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강조한다.

또한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을 ‘배후에서 주도하기(leading from behind)’ 전략이라 폄하하며,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대외적 신뢰도를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초국경 테러리즘 확산, 이란 및 북한 핵문제,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침공 등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시퀘스터 조치로 인해 국방비 감축이 현실화되고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이

33). 공화당의 대외정책 정강은 다음의 공화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www.gop.com/platform>.

침공(foreign aggression) 혹은 핵확산과 같은 현존하는 전통적 안보위협보다 더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올라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대만과의 관계를 중국보다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의 양안관계의 현상변경이 중국에 의해 시도될 시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1979년의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미국과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라고 정의하며 대만은 세계보건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미국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한다.

대만 이외에 정강에서 언급하는 현안의 우선순위는 중국으로, 민주당의 정강보다 좀 더 강경한 톤으로 중국은 정치적, 민주적 자유 보장을 통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인권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홍콩 민주화 문제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공화당의 정강에서 언급되는 현안의 우선순위는 1)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실패, 2)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3)사이버 안보, 4)공화당의 국가안보전략, 5)미군 및 군인 가족과 퇴역 군인에 대한 지지, 6)국제기구로부터 미국의 자율성 보장, 7)인권보호, 8)미국의 '관대'를 보여주는 대외원조, 9)인신매매 근절, 10)공공외교 등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요컨대 공화당의 정강에서 나타나는 대외정책은 미국의 리더십보다는 미국의 '힘'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안보현안보다는 여전히 국가간 전통안보 현안에 대외정책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미국예외주의적인 우월성과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이익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강이 공화당원 모두에게 일관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공화당 내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³⁴⁾ 첫째, 보수적 국제주의(conservative internationalism)로서 미국이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관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둘째, 보수적 혹은 자유지상주의적 고립주의(conservative or libertarian isolationism)로서 해외에서의 전쟁개진을 줄이고 국방비뿐만 아니라 해외 동맹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셋째, 보수적 국가주의(conservative nationalism)로서, 오바마 행정부 시기동안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공화당원들은 1)대외원조, 해외 국가건설 혹은 다자적 인도적 개입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2)한편 미국의 국방력 강화와 미국에 적대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강압적 접근방식을 선호했다. 즉, 독재자들에 대한 외교적 양보를 비판함과 동시에 강력한 반테러전략을 선호하였다.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보수적 국가주의를 선호하는 지지층은 공화당 내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중앙값(median)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외교안보정책공약을 제시할 때에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경선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어왔다.

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주요 현안별 입장

(1) 기본 정책 입장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 공약이 속속 공개되자 이러한 공약들이 어떠한 이념적 틀 안에 위치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이 시도해왔으나,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바는 없다. 콜린 듀엑(Colin Dueck)은 트럼프를 미국국가주의자(American nationalist)로 규정하였고, 월터 러셀 미드(Walter

³⁴⁾ Colin Dueck, *The Obama Doctrine: American Grand Strategy Toda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155~196.

Russell Mead)는 허무주의적 대중영합주의(nihilistic populism)로, 리치 로리(Rich Lowry)의 경우는 잭소니안 대중영합주의(Jacksonian populism)로 규정할 바 있다.

그러나 경선과정 속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일관성이 없이 언급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이라크전에 대해 찬성해오던 입장이 최근에는 이라크전에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제까지 트럼프 후보가 공개한 외교 안보 정책 공약이나 입장표명은 상당히 파편적이며 미국의 리더십이나 미국 대외정책의 포괄적 비전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 즉, 트럼프는 미디어의 주목을 다른 후보들보다 많이 받고는 있으나 상대후보에 대한 비판과 비난에 매진했을 뿐, 실질적인 정책적 제안을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2) 대외정책 접근법

2011년 발간한 트럼프의 저서 *Time to Get Tough*에 따르면 외교정책 독트린으로서의 몇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와인버거-파월 독트린과 유사하게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전쟁에 관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 군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바 있다.³⁵⁾ 또한 동맹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독트린에 얼마큼 신뢰도가 있는지는 지금의 선거 레토릭을 보아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3) 아시아 정책

트럼프 후보는 지난 3월 27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지불하는 비용이

³⁵⁾ Donald J. Trump, *Time To Get Tough*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2011), pp. 85~104.

너무 적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국 정책 관련,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 보호’에 방점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대외무역관계의 재조정과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만 언급한 바 있다. 최근의 현안으로는 남중국해 관련 입장 표명인데, 이에 관해서도 좀 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중국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억지해야 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결과물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 비즈니스(global leadership business)’에 복귀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³⁶⁾

한편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재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관계 제고에 힘쓰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는 이들 국가가 미국 국민의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2000년에 트럼프는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한다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고, 지난 2016년 2월 10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도 언급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4) 유럽 정책

지난 3월 브뤼셀 테러 사건 이후로 트럼프 후보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으며, 냉전시대의 유산물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북대서양

³⁶⁾ J. Berkshire Miller, “Trumps Base Politics in Asia,” *Foreign Affairs*, April 4, 2016, <www.foreignaffairs.com/print/1117132>. (검색일: 2016.4.5.).

조약기구에 대해 미국이 너무나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³⁷⁾

(5) 기타 국제안보 현안

트럼프 후보는 기후변화가 미국에게 있어 심각한 안보위협이 아님을 강조하며 공화당의 입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으며,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공사 역시 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SIL 관련해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지상군 파병을 통해 이들을 소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터넷상에서 ISIL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혹은 세뇌하는 작전을 막기 위해 이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 경제정책

대외무역 관련,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을 선호하나 지금 미국이 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불공정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이 실직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TPP 역시 비난하며, TPP 체결로 인해 궁극적으로 중국이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지적재산권 위반현황과 부적절한 수출보조금 지불현황을 공개하며 이 개혁안을 받아들여지게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법인세를 낮추고, 국가재정적자를 해소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미군 투

37). "Trump's foreign policy advisors on nuke, NATO, and China," *PBS News Hour*, March 31, 2016, <www.pbs.org/newshour/bb/trumps-foreign-policy-advisers-on-nukes-nato-and-china/>. (검색일: 2016.4.11.).

사력을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중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레토릭으로 분석되어왔다.³⁸⁾

(7) 이민정책

최근 트럼프는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자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벽(wall)을 설치하고 이에 대해 멕시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15년 12월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 이후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등록증 없는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를 국외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민정책에 있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5년 8월 트럼프 후보는 *Three-point plan for immigration reform* 제하의 정책 보고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미국 남부 국경지역에 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해 멕시코가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멕시코로의 송금(remittance)을 차단하고 비자발급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2)이민법 집행강화를 통해 이민자친화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범죄경력에 있는 불법이민자 송환, 비자만료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 강화, 출생시민권제도(birthright citizenship) 폐지 등을 제시, 3)합법이민 제한을 통해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주장하였다.³⁹⁾

38). Matthew Pennington, "Trump's Position on Trade, Alliances could Roil Asia Ties," *US News*, March 10, 2016, <www.usnews.com/news/politics/articles/2016-03-10/trumps-positions-on-trade-alliances-could-roil-asia-ties>. (검색일: 2016.3.29.).

39).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식 선거 홈페이지 참고 <www.donaldjtrump.com/positions/>

나. 테드 크루즈 후보의 주요 현안별 입장

(1) 기본 정책입장

테드 크루즈 후보의 경우 미국예외주의를 기반으로한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국제사회의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하며 공화당 특유의 미국적 가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⁰⁾

또한 오바마 행정부(클린턴 국무장관 포함) 시기 미국의 대외적 위상이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력한 군사력과 결의(resolve)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외정책의 목표가 민주주의 확산이 아닌 미국의 이익 수호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테드 크루즈의 대외정책기조는 전통적 보수주의 혹은 현실주의의 입장이라고 파악될 수 있을 것이나, 공개된 입장을 고려해보면 보수적 국가주의에 더욱 가깝다고 재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군사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과연 개입할 정도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인가의 문제를 항상 제기해왔다. 예컨대 시리아 공습에 있어서도 아사드 정권이 미국 국가안보의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며 공습을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를 해결할 명확한 계획과 출구전략을 마련한 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맥락에서 크루즈 후보는 군사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군의 해외 주둔과 민주국가 건설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민주주의 확산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immigration-reform>. (검색일: 2016.3.14.).

40)- 테드 크루즈 후보의 공식 선거 홈페이지 참고 <www.tedcruz.org>. (검색일: 2016.3.24.).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이 유약하여 보다 공세적으로 중동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란 핵협상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아시아 정책

크루즈 후보의 대중국 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의 맥락에 놓여있다. 즉, 미국이 군사, 경제적 우위에 놓여있음을 중국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미중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국 접근법은 협력보다는 갈등적 요소에 집중하는데, 예컨대 인권문제, 사이버테러, 대만 무기수출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일본과 같은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크루즈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공약은 약화되거나 혹은 역내 동맹국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을 꺾어버릴 것이라는 결의를 내비친 바 있다.

(3) 경제 정책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TPP에 대해서는 공화당 행정부 집권 시 미국 국민과 기업에게 좀 더 우호적인 협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4) 이민 정책

쿠바 이민자 가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후보는 공화당의 엄격

한 이민정책 수행 기조를 따르고 있다. 또한 국경안보(border security)와 불법이민으로 인한 미국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며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와 난민에게 보여준 사면조치 등을 비판해왔다.

또한 이민자 친화도시를 없애고, 불법이민자의 강제송환을 집행함과 동시에 합법이민도 궁극적으로는 제한하여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공화당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공약과 한반도 상황에서의 함의

우선 트럼프 후보의 경우, 대북정책에 있어서 군사력 사용과 강압적 수단을 선호한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보다 북미관계의 긴장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후보의 아시아 정책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대아시아 공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균형전략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대해 불평등한 분담금 배분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으며, 다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요컨대 이에 따르면 미국의 아시아 공약 및 동맹 체제 자체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관계제고에 나선 베트남과 인도에 대해서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들을 비판하여, 현재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주하는 노력들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트럼프의 아시아 공약은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시 한국의 동북아 외교환경은 크

게 위축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의 위상도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크루즈 후보의 경우 트럼프 후보의 입장보다 톤은 강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유사하다. 동맹 방기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 역내 동맹국의 역할이 커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보다는 경쟁 혹은 갈등적 요소를 부각하고 ‘힘을 통한 평화’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지형은 지금보다 훨씬 경색될 전망이다.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지금의 북한문제는 이전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터 시작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외교적으로 즉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 및 압박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Ⅲ. 주요 후보의 정책 네트워크 현황

본 장에서는 미국 양당 유력 대선주자의 정책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싱크탱크(think tank) 자문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특히 본 장은 각 후보의 안보 및 외교 자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싱크탱크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국내외 정책수립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개별 싱크탱크와 싱크탱크 전문가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영향력을 다른 영향력과 구별지어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영향력들이 복잡한 정치과정 내에 녹아 있어 실제로 독립적 싱크탱크의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크탱크와 관련 전문가들이 선거 및 입법과정을 포함한 미국정치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1. 민주당 주요 후보 정책 네트워크

가. 힐러리 클린턴

(1) 힐러리 정책자문 네트워크 특징

힐러리 캠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수백 명의 안보, 외교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 및 고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일해온 다수의 정책자문가들이 힐러리 캠프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힐러리의 정책자문의 다수는 남편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주지사 및 대통령이던 시절부터 쌓아온 네트워크이며, 힐러리가 뉴욕주 상원 의원과 국무장관 재임시절 구축한 인맥 역시 현재 정책자문단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힐러리의 정책 네트워크 중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한 탄탄한 인적자원은 국무장관 시절부터 민주당 및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교정책 인재들과 긴밀히 일하며 구축해온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⁴¹⁾

현재 힐러리 캠프는 세계 여러 지역 및 국가의 국방, 안보, 인권, 사이버테러 대응문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제언하는 10여 개의 실무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힐러리 캠프는 수석급(senior) 정책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따라 진영 내 다른 정책 전문가들과 10여 개의 실무그룹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정책자문단이 분권적으로 정책자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다수의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가 분권적으로 운영하는 힐러리의 싱크탱크의 주요한 장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직면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 후에도 안보, 외교문제에 대응할 다양한 전략을 미리 구상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41) Nick Gass, "Leon Panetta endorses Hillary Clinton," *Politico*, January 7, 2016, <www.politico.com/story/2016/01/leon-panetta-endorses-hillary-clinton-217451>. (검색일: 2016.3.28.); Michael Crowley, "Hillary Clinton's Secret Iran Man," *Politico*, April 3, 2015, <www.politico.com/story/2015/04/hillary-clintons-secret-iran-man-116647>. (검색일: 2016.3.28.); Josh Rogin, "Clinton Quietly Building Her Own National Security Council," *Bloomberg View*, January 28, 2016, <www.bloomberg.com/view/article/2016-01-28/clinton-quietly-building-her-own-national-security-council>. (검색일: 2016.3.28.); John Hudson, "Inside Hillary Clinton's Massive Foreign Policy Brain Trust," *Foreign Policy*, February 10,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2/10/inside-hillary-clintons-massive-foreign-policy-brain-trust>>. (검색일: 2016.2.26.).

(2) 힐러리의 주요 정책자문 구성

(가) 안보 및 외교

① 잭 설리번(Jack Sullivan)

- 안보정책 계획 및 평가 그리고 외교협상 전문가
- 예일 법대대학원 졸업 후 상원의원과 진보성향의 대법원 판사 스테판 브레이어(Stephen Breyer)의 보좌관, 2008년 대선에서 힐러리 캠프의 정책부국장(deputy policy director) 및 힐러리 국무장관 당시 차관직(deputy chief of staff) 및 정책계획국장(director of policy planning) 역임
- 힐러리의 가장 측근이자 최고위 정책자문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힐러리가 국무장관시절 개인 이메일로 국가기밀정보를 유출 및 배포했다는 스캔들을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클린턴과 가장 많은 약 1,600통의 관련 문건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됨.
- 힐러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힐러리 행정부 요직에 임명 될 것으로 가장 유력함.
- 오바마 정부의 이란과의 핵무기협상 과정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이란 관계자를 설득하고 협상한 인물임.
- 정책제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의 내용에 대한 근거가 실질적이고 논거 등이 분명함.
- 또한 힐러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평가를 요구받았을 때 자신의 소신대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짐. 예를 들어,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힐러리의 보좌관이었던 설리번은 힐러리가 제안한 군대파견을 통한 시리아 반군 지원 안에 대해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함.
- 이란 문제를 대화와 민주화운동 지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정

책제언하고 이를 추진한 과정을 보면, 온건한 외교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많음.

② 로라 로젠버거(Laura Rosenberger)

-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국무부에서 일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위원회(Security Council)에서 한국과 중국 담당 책임자로 미국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전문가로 활약하는 등 국무부에서 11년 이상 일한 경력 소유
- 잭 설리번(Jack Sullivan)과 함께 힐러리 캠프를 위해 다수의 정책자문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잭 설리번이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 캠프에 추천한 인물로 현재 잭 설리번과 더불어 힐러리 캠프의 핵심 자문위원이며 힐러리 캠프 내에서 선임급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도와 힐러리의 정책을 알리고 밝히는 역할 담당
- 힐러리 캠프에서 이스라엘과 중동을 포함한 전반적 외교정책방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교정책을 이해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신중하고, 전달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 지식이 상당히 풍부함.

③ 레온 파네타(Leon Panetta)

-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 및 미국 중앙정보부 국장(CIA Director) 역임
- 변호사 출신으로 연방의회 의원, 예산관리국(Office of Budget and Management)의 고위관리, 국가정보부 국장 및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 외교 및 행정에 관한 지문을 할 것으로 예상

- 국방장관으로 오바마의 국가예산 삭감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이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에 대응할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회의 국방비 예산 삭감 폭이 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종단을 강한 어조로 요구
- 국방장관 재직시절 오바마의 이란에서 미군의 완전철수, 시리아 온건과 반군을 돕는 방식으로의 시리아 정부 통제 그리고 정보입수를 위한 고도의 포로 심문 금지안에 반대함. 또한 부시행정부의 고문기술공개에 반대함. 따라서 외교와 안보정책에 오바마의 입장보다는 강경한 것으로 판단됨.

④ 탐 도닐론(Thomas Donilon)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만난 미국 고위관리
-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수석차관보로 재직,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오바마의 정책자문으로 일했으며,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2010~2013년)을 역임하는 등 미국의 안보정책결정에 있어 20년 넘게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
- 힐러리 캠프를 위해 대테러 및 중동 관련 정책자문. 최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에서 나타난 바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와 이스라엘과 이란문제에서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남.
- 이러한 갈등은 도닐론보다 친이스라엘적이고 대이란 정책에서는 보다 강경한 힐러리와 의 입장차도 한 원인이지만, 미국정치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백악관과 국무부의 긴장과 갈등으로 해석 가능
- 오사마 빈라덴 체포 작전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중동지역 대테러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이스라엘, 사우디

이라비아 전략가로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에 반대

⑤ 타마라 코프만 라이츠(Tamara Cofman Wittes)

- 브루킹스연구소의 중동정책센터장(Director of the Center for Middle East Policy)으로, 실무보다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짐. 힐러리 캠프에서 중동과 관련하여 정책자문을 하는 핵심 인물
-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도 정책 네트워크 인사로 명단에 포함하고 접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샌더스에게 자문을 했는지는 미지수

이 밖에 주요 정책자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⑥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국무장관

[중동정책 자문]

⑦ 더렉 콜렛(Derek Chollet): 전 오바마 행정부 관료

⑧ 프렘 쿠마(Prem Kumar):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하는 Albright Stonebridge Group의 부회장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문가

- 이들과 함께 중동정책 실무단에 브루스 쟈튼슨(Bruce Jentleson, 전직 국무부 관료), 버나뎃트 미한(Bernadette Meehan, 전직 외교관, 전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 그리고 브라이언 카툴리스(Brian Katulis,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선임연구원) 등이 활동

- 브라이언 카틀리스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동지역의 분쟁에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국제문제에 관심이 없는 정부라고 혹평

[대테러 정책 자문]

- ⑨ 란드 비어스(Rand Beers, 전 국토안전보장국(Homeland Security) 간부): 대테러 실무단을 이끄는 주요 책임자
- ⑩ 댄 벤자민(Dan Benjamin, 전 국무부 간부)
- ⑪ 맷 스펜스(Matt Spence, 전 국방성 간부)

[인권자문]

- ⑫ 헤럴드 고(Harold Koh(고흥주), 전 국무부 인권차관보)
- ⑬ 마이크 포스너(Mike Posner, 전 국무부 관리): 힐러리 국무부장관 시절 민주주의 인권·노동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역임. 현재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30년 이상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

[유럽과 러시아 정책 자문]

- ⑭ 마이클 맥파울(Michael Mcfaul): 전 러시아주재 미국대사 역임. 러시아가 세력 확장을 통해 서방세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⑮ 필 골든(Phil Gordon): 지난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관료
- ⑯ 줄리 스미스(Julie Smith): 부대통령 조 바이든의 전 국가안보

고문

- ⑰ 댄 컬츠 필란(Dan Kurtz-Phelan): 뉴어메리카재단(New America Foundation) 연구원. 2010~2012년에 힐러리 정책계획 자문위원으로 활동. 힐러리 국무장관시절 연설문 작성

(나) 경제

①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케인즈학과 경제학자
-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정책, 의료보험정책, 세금정책 및 환경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
- 오랫동안 진보사회주의자로 알려진 크루그만이 힐러리의 당선 후 힐러리를 도와 요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진보주의자로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의 급진적 경제개혁안을 실효성이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
- 그러나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와 힐러리와 함께 대선 후보자로 출마했던 존 에드워드(John Edwards)를 지지했었음. 당시 '경제 및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라는 진보 어젠더를 실현하는데 권력과 부자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하며 월가의 정치적 지원을 받은 힐러리 비판
-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대선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제안하는 샌더스가 아니라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중국의 성장둔화와 하향세 경기의 주요원인은 중국경기의 조정 국면을 다루는 현 중국 정부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3) 힐러리의 정책방향 예측 및 분석

싱크탱크 자문단 구성으로 본 힐러리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힐러리의 자문단은 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에 있어 샌더스의 정책자문단보다 우위에 놓여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구체적 정책제시가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선거에서 힐러리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힐러리의 정책 네트워크는 힐러리가 대선 후보로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들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효과적 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힐러리 대선후보는 샌더스에 비해 민주당,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다수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책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현 114대 연방의회에서 46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중 38명이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는 힐러리가 안정적 대선후보 경선회정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의 안정적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정책에서의 강경론자인 도널론과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al internationalist)인 올브라이트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힐러리가 당선 될 경우 외교정책이 오바마보다는 개입차원에서 강경입장이 될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백 명으로 구성된 힐

러리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정책자문들의 이념이나 정책 입장이 민주당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 오바마에 비해 개입주의적인 안보·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힐러리도 현 제재국면의 연장선상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힐러리의 안보 및 외교 정책관련 자문 네트워크가 주로 중동외교 전문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현재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도 중요하나, 힐러리는 중동 역시 미국외교에서 주요 지역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동지역과의 안보·외교, 특히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관여한 인물들이 자문위원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힐러리가 당선되면 미국의 북핵 문제해결에 있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더욱 주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정책 관련,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균형 정책이 국무장관으로서 힐러리의 핵심 외교적 성과로 평가되지만, 힐러리가 오바마 정부에서 거둔 이 외교적 성과를 계속 추진할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현재의 아시아지역 자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힐러리의 아시아 전문가 그룹을 살펴보면 몇몇의 유명 정치학자를 제외하고 영향력 있는 정책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행정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경우 샌더스 돌풍이 미국 대중의 경제적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크루그먼과 같은 사회진보주의자를 경제자문위원으로 전면에 내세운 점을 보면 복지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정책적 초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나. 버니 샌더스

(1) 샌더스 정책자문 네트워크 특징

샌더스의 경우 대선 경선 초반부터 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경험과 정책 대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대선 경선이 진행되면서 안보·외교 정책에 자문 네트워크를 강화해오고 있다.⁴²⁾ 이러한 네트워크 강화 노력은 샌더스가 구체적인 안보·외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공약들은 국내 경기회복과 경제 불평등 극복이라는 샌더스의 확고한 정책방향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샌더스는 안보 및 국방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협상, 테러리스트를 저지할 드론(drone)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반면, 미국 블루칼라 노동자의 일자리보호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이란 및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의 자원을 들여 개입해 풀기보다는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선 경선에서나 경선결과 당선되더라도 대외안보를 위한 미국의 경제부담 축소 및 국내경제 보호라는 샌더스의 정책목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분명한 샌더스의 정책목표가 자문위원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구체적 방안으로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즉, 다양한 문제에 유연한 적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힐러리와 달리 경제문제 해결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샌더스의 경우 실제로 안보·외교 정책 네트워크가 제한할 수 있는 정책제언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2)- John Hudson, "Exclusive: Bernie Sanders Begins Building Foreign Policy Team," *Foreign Policy*, February 24, 2016, <<http://foreignpolicy.com/2016/02/24/exclusive-bernie-sanders-begins-building-foreign-policy-team>>. (검색일: 2016.2.26.).

(2) 샌더스 주요 정책자문

(가) 안보 및 외교

① 로렌스 코브(Lawrence Korb)

- 현재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수석연구원, 방위전략과 국방비 부분 전문가로 외교정책 자문단의 핵심 자문인사
- 미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에서 국가안보연구 부서장(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Studies),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서 외교정책연구부처 선임연구원 역임.
- 레이건 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외교안보 분야의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
- 강경 보수적 성향의 레이건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조지 부시(George Bush)의 정책자문을 맡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샌더스의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것이 다소 의외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초선 당시 오바마 캠프에서 오바마의 외교정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으며 현 미국무장관 존 케리(John Kerry)를 위해 정책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성공적인 안보정책을 펼친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출신 정당과 관계없이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 즉, 안보목표를 달성하는데 외교적 방안 강조
- 미국의 경제 불평등 해소와 맞물려 미국의 군비절감 필요성 강조
- 이러한 코브의 정책이념은 미국의 무력개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이라는 샌더스의 안보정책 핵심에 부합

② 레이 타케이(Ray Takeyh)

-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소속, 국무부 대이란 선임고문 역임
- 중동전문가, 특히 이란출신으로 이란전문가로 대이란 정책에서 협상을 통한 이란의 핵문제 해결에 반대하는 공격적(Hawkish) 입장의 신보수주의 학자로 알려져 있어 민주당과 연계하고 있는 샌더스 자문위원을 맡은 점이 다소 예외적임.
- 연방의회 내 각종위원회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자문 및 증언을 한 경험이 많아 의회 네트워크도 넓은 것으로 판단됨.

③ 빌 프렌치(Bill French)

- 국가안보네트워크(National Security Network)라는 싱크탱크의 정책 분석가(policy analyst). 이 싱크탱크는 매우 진보적인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보수주의 움직임을 제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연방의회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의 이슬라믹 국가(Islamic State: IS)의 민간군 문제와 관련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 이 증언에서 그는 수니(Sunni) 극단주의자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전쟁’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전쟁에 반대하는 샌더스의 안보인식과 맥을 같이함.
- 현재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외부정책고문으로는 유일한 인물로 알려짐.

* 타마라 코프만 위츠(Tamara Cofman Wittes,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도 샌더스의 자문위원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으나, 클린턴 캠프의 중동문제 실무그룹에서 선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나) 경제

① 제럴드 프리드만(Gerald Friedman)

- 메사추세츠 암허스트 대학(Massachusetts at Amherst) 경제학과 교수
- 경제학자로 현재 샌더스의 세금, 금융 그리고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한 실질적 정책 제언을 하는 핵심인물로 알려짐.
- 전 국민 의료혜택의 실현방안으로 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세입을 증가시킨다는 구상
- 그러나 세제개혁이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의문과 함께, 프리드만의 의료보험개혁안은 세제확보방안이 미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구상된 것이라 실제로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제시한 방안의 실현 및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취약점이 있음.

(3) 샌더스의 정책 방향 예측 및 분석

샌더스가 이념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입장의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지만, 샌더스의 외교안보 자문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의 특징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민주당의 안보나 외교정책과는 눈에 띄게 다른 입장을 취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샌더스가 외교안보에 있어 아직 경험과 정확한 정책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으나, 힐러리가 진보진영 내에서 다양한 입장을 안보·외교정책에 반영하는 반면, 샌더스는 보수와 진보 양쪽의 시각을 안보·외교 정책에 녹여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공화당 주요 후보 정책 네트워크

가. 도널드 트럼프

(1) 트럼프 정책자문 네트워크 특징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 관련 공격적인 발언은 트럼프 후보의 대외정책 자문을 누가 맡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가 자문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혹은 알라배마 상원의원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R. Ala)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만 언급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들이 계속되자 지난 3월 100여 명이 넘는 공화당 관료들은 트럼프 후보를 반대한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하기도 하였고, 당 내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자문단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난 3월 21일 트럼프는 5명의 대외정책 자문단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대부분 이전 행정부의 고위급 관료였거나 싱크탱크 출신의 전문가 출신은 아니다. 또한 트럼프 역시 “내가 이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It doesn't mean that I'm going to use what they're saying)”라고 언급함으로써 자문단과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거나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상황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궁극적인 최종 결정은 결국 트럼프 스스로가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월 이후로도 조금씩 대외정책 자문단의 명단을 공개 중에 있다.⁴³⁾

⁴³⁾ Damian Paletta, “Donald Trump Lists Five Foreign Policy Advisers,”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21, 2016, <blogs.wsj.com/washwire/2016/03/21/donald-trump-lists-five-foreign-policy-advisers/>. (검색일: 2016.3.29.); Jeremy Diamond, and Nicole Caouette, “Donald Trump Unveils Foreign Policy Advisers,” *CNN*, March 21, 2016, <edition.cnn.com/2016/03/21/politics/donald-trump-foreign-policy-team>. (검색일: 2016.3.29.).

(2) 트럼프 주요 정책자문

①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 현 알라배마주 공화당 상원의원(법사위원회 소속)
- 1994년 알라배마주 법무장관 재직, 1996년, 2002년, 2008년, 2014년 알라배마주 상원의원 당선
- 상원의원 가운데 보수적 인사로 정평이 나있으며 지난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당시 많은 정책들, 예컨대 이라크 전쟁과 동성 결혼 금지법안을 지지한 바 있음.
- 과거 상원의원 재직 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일한 경력이 있음.

②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

- 2003년까지 30여 년간 미 육군 복무, 이후 정부기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공 및 컨설팅하는 GTSI Corp. 등에서 이사진으로 역임
- 현재 버지니아에 위치한 CACI International 부사장으로 재직 중
-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및 국방 분야 전문가로 영입

③ 카터 페이지(Carter Page)

- Global Energy Capital (투자회사) 전무이사(managing partner)로 재직 중
- 석유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 과거 미국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연구원으로 근무
- 러시아 및 카스피해 지역 경제발전 연구

④ 조지 파파도폴로스(George Papadopoulos)

- 이번 경선 과정에서 벤 카슨(Ben Carson) 후보의 정책 및 경제 자문단으로 역임하였음.
- 2016년 대선 경선 자문단으로 일하기 전 파파도폴로스는 런던에 위치한 석유회사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국제법 런던센터(London Center of International Law Practice)의 디렉터로 일한 바 있음.
- 보수적 싱크탱크로 알려진 허드슨 센터(Hudson Center) 연구위원으로 재직
- 2009년 드폴 대학(De Paul University) 졸업
- 석유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⑤ 월리드 퍼레스(Walid Phares)

- 2012년 미트 롬니(Mitt Romney)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단으로 일한 바 있음.
-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교수로 재직 중
- 2011년 퍼레스는 레바논 우익 민병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 민병대는 15년에 걸친 레바논 내전기간 동안 무슬림에 대한 전범 의혹을 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중동 문제 및 국제안보 전문가

⑥ 조셉 슈미츠(Joseph Schmitz)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방부 조사관(Inspector)으로 재직하였으나, 전 부시(George H.W. Bush) 행정부 관료 조사과정을 방해하고 뇌물 수수혐의로 사임함.
- 이후 국방부 군납업체인 블랙워터(Blackwater)에 재직 중

⑦ 게리 해럴(Gary Harrell)

- 해럴은 미 육군에 30여 년 복무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였음.
- 2008년 퇴역

⑧ 척 큐빅(Chuck Kubic)

- 미 해군에 30여 년간 복무

⑨ 버트 미주사와(Bert Mizusawa)

- 은성 훈장(Silver-star)을 수여받은 한국전 참전용사

(3) 트럼프의 정책 방향 예측 및 분석

트럼프의 대외정책 네트워크는 그 규모나 다양성에 있어 매우 협소하며, 특히 군인 혹은 국방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책 제언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아시아 정책의 경우 전문가가 전무하다시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도 수단도 매우 부족한 현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제시할 정책 방향 역시 과연 동북아에서의 현 미국의 접근방식을 수용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나. 테드 크루즈

(1) 크루즈 정책자문 네트워크 특징

크루즈 후보는 스스로를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공화당의 기성(established) 후보로 정의내리곤 해왔는데, 실제 크루즈 후보가 공개한 대외정책 자문

단 현황을 살펴보면 트럼프 후보의 자문단보다 훨씬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강한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⁴⁴⁾

(2) 크루즈 주요 정책자문

① 프랭크 가프니(Frank Gaffney)

- 안보정책연구소(Center for Security Policy) 소속으로 반 무슬림(anti-Muslim) 성향이 강한 음모론자로 알려짐. 주로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반대하는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② 엘리엇 에이브람스(Elliot Abrams)

- 극단적 신보수주의적 매파 성향을 가진 인물로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고, 이란-콘트라 사건 당시 의회 청문회에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기소된 적이 있음.
- 현재 미 외교위원회 연구원이며 크루즈 캠프에 오기 전 마르코 루비오 캠프에서 일했음.

③ 프레드 프레이츠(Fred Fleitz)

- 전 CIA 분석가이자 안보정책연구소(Center for Security Policy) 수석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으로 재직 중
- 고문 등 강압적 수사방식을 공개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무슬림들을 폭력적 극단주의자로 매도하여 논란을 일으킨바 있음.

⁴⁴⁾ Haroon Moghul, "Think Trump's an Islamophobe? Meet Ted Cruz's National Security Adviser," *The Guardian*, March 18, 2016, <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mar/18/islamophobia-ted-cruz-national-security-advisor-frank-gaffney>. (검색일: 2016.3.24.).

④ 앤드류 맥카시(Andrew McCarthy)

- 법과 반테러 센터(Center for law and Counterterrorism) 공동 창업자
-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킴.

⑤ 빅토리아 코트(Victoria Coates)

- 크루즈 후보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가안보 자문을 해임.

⑥ 짐 탈렌트(Jim Talent)

- 전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
- 2008~2012년에 미트 롬니의 자문단으로 일했음.

⑦ 메리 하벡(Mary Habeck)

- 조지 부시 대통령 국가안보회의 실무진
- 지하드 조직 및 테러리스트 전문가

(3) 크루즈의 정책 방향 예측 및 분석

크루즈의 정책자문단 구성은 반무슬림 성향을 가진 전문가 혹은 중동 지역이나 테러리즘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과 싱크탱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크루즈 후보의 판단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현안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트럼프가 일으키는 센세이션을 압도할 수 있는 의제가 바로 반무슬림 정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위와 같은 자문단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정책제안은 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주요 후보의 의회 내 네트워크 분석

의회 내에서 특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 가능한데, 본 장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의원의 의정 활동, 구체적으로 법안의 공동발의 참여를 분석함으로써 이번 미국 대선 후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의 유력 후보의 의회 내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당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후보들의 발의 및 공동발의 참여를 검토한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원의원의 경우 주 단위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 전체가 하나의 지역구이다. 다시 말해, 상원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을 뽑아 준 주 전체의 안보, 경제, 금융, 의료, 교육, 환경 등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원의원이 모든 분야를 알고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원의원은 몇몇 국가 주요 정책 분야나 자신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법안발의에 참여여부나 자신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법안의 지지여부 결정에 있어 다른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의 의견을 따르거나, 비슷한 성향의 의원이 지지하는 법안을 같이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본인의 정책이념뿐만 아니라 지역구 주민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지역구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선호와 가까운 후보를 의원으로 뽑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원의원의 특정 법안 발의 참여 및 지지는 의원들 자신의 정책 견해로 볼 수 있다.⁴⁵⁾

45) Michael S. Rocca, and Gabriel R. Sanchez, "The Effect of Race and Ethnicity on Bill Sponsorship and Cosponsorship in Congress,"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36, No. 1 (2008), pp. 130~152; Wendy J. Schiller, "Senators as Political Entrepreneurs: Using Bill Sponsorship to Shape Legislative Agenda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1 (1995), pp. 186~203; Wendy Tam Cho, and James H. Fowler, "Legislative Success in a Small World: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Dynamics of Congressional Legislation,"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1 (2010), pp. 124~135.

이러한 연방의원의 법안발의 참여 및 지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원들이 특정 법안의 발의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비슷하거나 이러한 맥락에서 친분이 있는 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⁴⁶⁾

1. 민주당 주요 후보 의회 내 네트워크

가.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의 경우 2001년 107대 연방의회부터 2008년 대선 출마 전까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상원의원 2기가 시작된 직후 출마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원의원 제 1기(2001~2006년) 기간 중 마지막 회기인 2005~2006년 109대 연방의회 상원에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의회 네트워크를 파악했다. 특히 이 기간 중 힐러리가 발의 및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해 법으로 확정된 20개의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을 검토하였다.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은 의회 내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이러한 법안의 경우 의원 간 정책목표나 정책이념의 차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주요 법안 중 공동발의자가 20명 이하인 것을 살펴봄으로써 유력 후보들의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유사한 정책선호와 지지를 하는 의원 네트워크 파악해 보았다.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 바이든(Joe Biden, 델러웨어주),

46). Matthew B. Platt, "Legislative Problem-Solving: Exploring Bill Sponsorship in Post-War America," unpublished paper, September 7, 2010, pp. 5~7, <http://scholar.harvard.edu/files/mplatt/files/bill_introduction_paper4.pdf?m=1360039230>. (검색일: 2016.3.28.).

버락 오바마(Barak Obama, 일리노이주),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뉴욕주), 에드워드 케네디(Edward Kennedy, 1932~2009년), 더빈 리차드(Richard Durbin, 일리노이주), 그리고 칼 레빈(Carl Levin, 미시간주)은 본 장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법안까지 포함해 다수의 법안에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표 IV-1〉 힐러리 클린턴의 공동발의 의원

| 법안 | 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A bill to amend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to lift the patient limitation on prescribing drug addiction treatments by medical practitioners in group practices, and for other purposes.” | Sen. Levin, Carl [D-MI] | Sen. Hatch, Orrin [R-UT] Sen. Biden, Joseph [D-DE] Sen. Grassley, Chuck [R-IA] Sen. Durbin, Richard [D-IL] <u>Sen. Clinton, Hillary [D-NY]</u> |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Relief, Security, and Democracy Promotion Act of 2006 | Sen. Obama, Barack [D-IL] | Sen. Brownback, Sam [R-KS] Sen. Durbin, Richard [D-IL] Sen. DeWine, Mike [R-OH] Sen. Inhofe, James [R-OK] Sen. Leahy, Patrick [D-VT] Sen. Collins, Susan [R-ME] <u>Sen. Clinton, Hillary [D-NY]</u> Sen. Lieberman, Joseph [D-CT] Sen. Landrieu, Mary [D-LA] |

| 법안 | 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 | Sen. Johnson, Tim [D-SD] Sen. Mikulski, Barbara [D-MD] Sen. Dayton, Mark [D-MN] |
| Military Personnel Financial Services Protection Act | Sen. Enzi, Michael B. [R-WY] | <u>Sen. Clinton, Hillary</u> <u>[D-NY]</u> Sen. Hagel, Chuck [R-NE] Sen. Schumer, Charles [D-NY] Sen. Kennedy, Edward [D-MA] Sen. Bingaman, Jeff [D-NM] Sen. Wyden, Ron [D-OR] Sen. Durbin, Richard [D-IL] Sen. Bunning, Jim [R-KY] Sen. Nelson, Bill [D-FL] Sen. Reed, Jack [D-RI] Sen. Dodd, Christopher [D-CT] Sen. Burns, Conrad [R-MT] |
| A bill to amend the USA PATRIOT ACT to extend the sunset of certain provisions of that Act and the lone wolf provision of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to July 1, 2006. | Sen. Sununu, John E. [R-NH] | 공화당 발의법안에 힐러리, 바이든, 그리고 오바마 등 민주당 의원 29명이 공동발의. Chuck Hagel도 참여 |

| 법안 | 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 Sen. Burr, Richard [R-NC] | Sen. Kennedy, Edward [D-MA] Sen. Enzi, Michael [R-WY] Sen. Harkin, Tom [D-IA] Sen. Gregg, Judd [R-NH] Sen. Frist, William H. [R-TN] Sen. Mikulski, Barbara [D-MD] Sen. Hatch, Orrin [R-UT] Sen. Clinton, Hillary [D-NY] Sen. Roberts, Pat [R-KS] Sen. Isakson, Johnny [R-GA] Sen. DeWine, Mike [R-OH] Sen. Alexander, Lamar [R-TN] Sen. Bayh, Evan [D-IN] Sen. Chambliss, Saxby [R-GA] |
| Iraq Reconstruction Accountability Act of 2006 | Iraq Reconstruction Accountability Act of 2006 | 총 29명 공동발의 의원 중 힐러리를 포함한 20명이 민주당 의원 |
| Terrorism Risk Insurance Extension Act of 2005 | Sen. Dodd, Christopher [D-CT] | 힐러리를 포함 민주당, 공화당 총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
|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 Sen. Coburn, Tom [R-OK] | 힐러리를 포함 총 47명이 공동발의 |
| Palestinian Anti-Terrorism Act of 2006 | | 90명의 상원의원 공동발의 |

출처: 미 연방의회, (www.congress.gov)의 법안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1) 힐러리의 주요 공동발의자

(가) 민주당 의원

①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 변호사 출신으로 1998년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3번의 재선 모두 승리
- 현재 힐러리를 대선후보로 적극 지지하고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힐러리를 변호
- 그러나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정치인으로 힐러리 당선 후 요직으로 발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② 리차드 더빈(Richard Durbin/Dick Durbin, 일리노이주)

- 현 미연방상원에서 소수당인 민주당의 원내 부총무(Senate Minority Whip or Leader)
- 현재 연방의회 내에서 민주당 서열 2위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을 때 상원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endorsement). 오바마의 정치생활의 멘토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음.
-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으로, 이번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샌더스를 대선후보로서 높이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힐러리를 대선후보로 지지 선언

③ 칼 레빈(Carl Levin, 미시간주)

- 힐러리가 상원의원 당시 상원의 주요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 위원장으로 힐러리와 함께 이라크 수상 노리 말리키(Nourial-Maliki)의 교체 주장

- 최근 공개된 힐러리 국무장관 재직기간 중 이메일에서도 이란 핵 무기와 관련 제재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남.

(나) 공화당 의원

① 척 헤이글(Chuck Hagel, 네브라스카주)

-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 역임(2013~2015년)
- 부시 재임 기간 중 상원의원으로 이라크 전쟁과 애국자법안(Patriot Act)에 찬성하였으나, 후에 이라크 전쟁과 애국자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힘.
- 공화당 출신 정치인으로 드물게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회는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의회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문제에 미국의회가 깊이 개입하기보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② 헤치 오린(Orrin Hatch, 유타주)

-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사법부 관련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 상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 지도부로 역임하던 지난 2010년 대법원판사 공석 당시 힐러리를 대법원 후보자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음.
- 지난 2월 대법원 판사 안토닌 스칼라(Antonin Scalia)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미국 대법원 판사 후임을 오바마 행정부가 지명하는 것에 반대

(2) 힐러리 네트워크 분석

힐러리 뿐만 아니라 오바마의 상원의원 시절 공동발의를 자주한 것으로 나타난 공화당의 척 헤이글의 경우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와 함께 국방

장관을 지냈다. 또한 이념적으로 샌더스와 가깝다고 알려진 리차드 더빈 역시 힐러리와 함께 공동발의자로 자주 참여하였고, 실제로 힐러리를 후보로 지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한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미 대선후보의 미래 정책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유효함을 실질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버니 샌더스

샌더스의 경우 오랫동안 무소속의원으로 활동해오다 현 114대(2015~2016년)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무소속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역시 여러 가지 절차, 행정면에서 민주당과 연계하여 의정활동을 해왔다. 현재 114대 연방의회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샌더스는 113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113대(2013~2015년)에서 샌더스가 발의하거나 공동발의에 참여한 20개의 법안 중 주요법안으로 판단되는 법안, 특히 안보·외교 관련 주요 법안은 없으며, 이는 샌더스가 대선후보로 안보·외교 분야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일부 뒷받침한다.

113대 의회에서 샌더스가 발의한 법안 중 법으로 확정된 총 2개의 법안은 ‘A bill to designate the facility of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located at 35 Park Street in Danville, Vermont, as the “Thaddeus Stevens Post Office”와 ‘Veterans’ Compensation Cost-of-Living Adjustment Act of 2013 113th Congress(2013~2014)’이다. 전자는 버몬트주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같은 주 출신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 리히 페트릭(Leahy, Patrick J)과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후자의 경우도 발의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한 건도 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공화당 의원 8명과 민주당 의원과 7명이 균형적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

안인데, 다시 말해, 양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초당파적 법안이라는 의미이다.

샌더스 후보가 공동발의로 참여한 다른 18개 법안의 경우, 샌더스는 공동발의자가 수적으로 많은 법안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샌더스의 경우 특징적인 공동발의자를 규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샌더스가 무소속 의원으로 당론이나 당규율보다 자신의 정책 이념과 의사에 따라 법안을 지지한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는 재선을 염두에 둔 무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 업적을 쌓는데 있어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균형 잡힌 초당파적 법안에 참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당제가 이념적 정치 구조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국정치 현실에서 당적이 있는 의원과 달리, 이념성이 강한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과된 법안의 공동발의만을 분석하여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2. 공화당 주요 후보 의회 내 네트워크

가. 테드 크루즈

크루즈 후보의 경우 2012년 상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된 건은 113대 회기의 경우 1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은 2건에 불과하다. 크루즈 후보가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은 ‘A bill to deny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o Any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who has been found to have been engaged in espionage activities or a terrorist activity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poses a threat to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Interests(S. 2195)’로서, 유엔대표로 미국에

입국한 외교관들 가운데 간첩행위나 테러리즘 행위로 인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본 법안은 총 6명의 공동발의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공화당 의원이다.

공동발의자들은 다니엘 코트(Daniel Coat R-IN), 쓰드 코크란(Thad Cochran, R-MS), 린지 그래엄(R-SC), 로버트 포트만(R-OH), 데이빗 비터(David Vitter, R-LA), 마크 커크(Mark Kirk, R-IL)이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 2건의 공동발의자 규모는 모두 20명을 넘어 본 분석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법안은 ‘United States-Israel Strategic Partnership Act of 2014(S.2673)’로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수록해 놓은 바버라 박서 의원(Barbara Boxer, 민주-캘리포니아)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는 모두 80명으로, 민주당 의원 47명, 공화당 의원 32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모두 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법안이다. 두 번째 법안의 경우 ‘Near East and South Central Asia’s Religious Freedom Act of 2014’로, 중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로이 블런트 의원(Roy Brunt, 공화-미주리)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 역시 22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 공화당 의원 17명이 포함되어 있다.

테드 크루즈 후보의 법안발의 및 공동발의 현황은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관심 영역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된다. 일단 앞서 논의했던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에서도 밝혀졌듯 중동지역, 테러리즘과 관련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영역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의 및 공동발의 법안을 보았을 때, 크루즈 후보는 의회 내에서의 친분관계보다는 자신의 관심영역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만 발의하거나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 경선의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 공약과 그들의 정책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미국 국내 정치환경, 특히 기존의 선거와는 달리 아웃사 이더 후보들이 현저하게 약진하게 되는 정치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주·공화 양당의 주요 후보들, 즉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후보의 주요 대외정책 공약을 분석하였고, 특히 한국의 통일외교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주요 후보들이 밝힌 대아시아 전략 전반을 살펴보고,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통일외교 운신의 폭도 가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요 후보들의 의회 및 싱크탱크 정책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주요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온 법안의 현황과 이를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의회 내부에서의 네트워크도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 지금의 제재국면에 놓여있는 대북정책의 모멘텀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볼 수 있다. 세간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오바마 행정부보다 대외정책에 있어 더욱 강경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주요 공약과 정책형성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총론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정책형성 네트워크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사람이거나 혹은 기존의 국무장관 시절 같이 근무했던 관료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책결정은 단순히 인적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성향과 대외전략환경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또한 선거 승리 이후 전체적인 내각 진용과 국제환경 변화 특히 한반도 문제의 경우 미중관계의 변화추이와 북한의 행동양상에 따라 정책은 달라질 수도 있으며, 또한 지금 미국의 경기회복국면이 다음 행정부시기에 얼마나 현저히 나타날 수 있는지도 관건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클린턴 후보의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클린턴을 둘러싼 여타 대내외환경으로부터의 구조적 요인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외 버니 샌더스, 테드 크루즈, 도널드 트럼프는 대부분 동맹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동맹국의 금전적 부담과 해당 지역 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역시 예외가 아니다. 또한 지금의 재균형정책을 통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재보장 역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도 클린턴뿐이다. 또한 미중관계를 협력과 경쟁, 갈등의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후보 역시 클린턴뿐으로, 이에 따라 미중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후보 역시 클린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선국면이 끝나지 않았고, 주요 후보들의 각축이 7월 전당대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의 제재국면에서 모든 주요 후보들에 대한 대북정책 및 통일외교 차원의 접근 및 정책공공외교차원의 포괄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는 지금의 선거 국면에 국한되지 않고 신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의회나 그 외 정책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와 대북 정책의 모멘텀이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Abelson, Donald E. *A Capitol Idea: Think Tanks and US Foreign Policy*.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6.
- Auerswald, David P., and Colton C. Campbell.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National Secur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Dueck, Colin. *The Obama Doctrine: American Grand Strategy Toda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Hetherington, Marc J., and Jonathan Weiler. *Authoritarianism &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Krasner, Stephen D.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 Investment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 Lindsay, James M. *Congress and the Politics of US Foreign Poli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 McGann, James G., and Erik C. Johnson. *Comparative Think Tanks, Politics and Public Policy*. London: Edward Elgar Publishing, 2006.
- Sestanovich, Stephen. *Maximalist*. New York: Vintage Books, 2014.
- Stone, Diane. *Capturing the Political Imagination: Think Tanks and the Policy Process*. London: Frank Cass, 1996.
- Thurber, James A., and Antoine Yoshinaka. *American Gridlock: The Sources, Character, and Impact of Political Polariz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 Trump, Donald J. *Time To Get Tough*.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2011.
- Wiarda, Howard J. *Think Tanks and Foreign Policy: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Presidential Politics*. Lanham, MD: Lexington Books, 2010.

2. 논문

- Abelson, Donald E., and Christine M. Carberry. "Policy Experts in Presidential Campaigns: A Model of Think Tank Recruitment."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27, No. 4, 1997.
- Fowler, James H. "Legislative Cosponsorship Networks in the US House and Senate." *Social Networks*. Vol. 28, 2006.
- Rocca, Michael S., and Gabriel R. Sanchez. "The Effect of Race and Ethnicity on Bill Sponsorship and Cosponsorship in Congress."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36, No. 1, 2008.
- Schiller, Wendy J. "Senators as Political Entrepreneurs: Using Bill Sponsorship to Shape Legislative Agenda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9, No. 1, 1995.
- Tam Cho, Wendy and James H. Fowler. "Legislative Success in a Small World: Social Network Analysis and the Dynamics of Congressional Legislation."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1, 2010.
- Woon, Jonathan. "Bill Sponsorship in Congress: The Moderating Effect of Agenda Positions on Legislative Proposals."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1, 2008.

3. 기타

Bloomberg View.

CNN.

Korea Joongang Daily.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shington Post.

US News.

Gallup. "Presidential Election 2016: Key Indicators." 2016.3.2~6.

O'Hanron, Michael. "Obama the Carpenter: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Legacy." The Brookings, May 2015.

Pew Research Center.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June 2014.

_____. “Campaign Exposes Fissures over Issues, Values and How Life Has Changed in the US.” March 2016.

Platt, Matthew B. “Legislative Problem-Solving: Exploring Bill Sponsorship in Post-War America.” unpublished paper. September 7, 2010.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Shared Values, New Frontiers.” October 16, 2015.

도널드 트럼프 공식 웹사이트 <www.donaldjtrump.com>.

미 국무부. <www.state.gov>.

미 연방의회. <www.congress.gov>.

미국 공화당. <www.gop.com/platform>.

미국 민주당. <www.democrats.org/party-platform>.

미국진보센터. <www.americanprogress.org>.

백악관. <www.whitehouse.gov>.

버니 샌더스 공식 웹사이트 <<https://berniesanders.com>>.

전략국제센터. <www.csis.org>.

테드 크루즈 공식 웹사이트 <www.tedcruz.org>.

힐러리 클린턴 공식 웹사이트 <www.hillaryclinton.com>.

Forbes. <www.forbes.com>.

Foreign Affairs. <www.foreignaffairs.com>.

Foreign Policy. <<http://foreignpolicy.com>>.

Forward. <<http://forward.com>>.

Gallup. <www.gallup.com>.

Newsweek. <www.newsweek.com>.

PBS News Hour. <www.pbs.org>.

Pew Research Center. <www.people-press.org>.

Politico. <www.politico.com>.

The Atlantic. <www.theatlantic.com>.

The Brookings. <www.brookings.edu>.

The Diplomat. <<http://thediplomat.com>>.

The Guardian. <www.theguardian.com>.

The National Interest. <<http://nationalinterest.org>>.

VOX. <www.vox.com>.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 |
|---|-------|
|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 통일연구원 |
|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 통일연구원 |
|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 통일연구원 |
|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 통일연구원 |
|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 통일연구원 |
|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 통일연구원 |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
|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 통일연구원 |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 통일연구원 |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 | |
|---|-------|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 전성훈 외 |
|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 전성훈 외 |
|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 전병근 외 |
|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 박형중 외 |
|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 임강택 |
|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 김규륜 외 |
|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 이기현 |
|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 박영자 |
|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 박형중 외 |
|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 박영자 외 |
|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 김규륜 |

■ 통일나침반 ■

| | |
|---|----------------|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 김진하 외 |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 한동호, 도경욱 |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 김석진 |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 이애리아, 이창호 |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김갑식 외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통일플러스

| | |
|---------------------------------------|-------|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 통일연구원 |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 통일연구원 |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 통일연구원 |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 통일연구원 |
|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12 | 김수암 외 | 19,5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 손기웅 외 | 23,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3 | 조정현 외 | 24,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 조정현 외 | 23,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4 | 한동호 외 | 24,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 한동호 외 | 23,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5 | 도경욱 외 | 19,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 도경욱 외 | 23,000원 |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 이기현 외 | 6,000원 |
|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 김규현 외 | 8,500원 |
|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 박종철 외 | 10,000원 |
|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 손기웅 외 | 12,000원 |
| 2013-05 오바마 ·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 배정호 외 | 11,000원 |
|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 조한범, 황선영 | 6,000원 |
|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 이규창 외 | 12,500원 |
|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 조정아 외 | 15,000원 |
| 2013-09 북한의 핵 · 미사일 대응책 연구 | 홍우택 | 6,000원 |
|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 박형중, 최사현 | 7,000원 |
|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 임강택 | 11,000원 |

| | | |
|---|------------------------|---------|
|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 18,000원 |
|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 전병곤 외 | 9,000원 |
|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 박종철 외 | 13,000원 |
|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 배정호 외 | 16,500원 |
|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 조정아 외 | 11,000원 |
|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 조정아 외 | 6,000원 |
|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 박형중 외 | 13,500원 |
|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 임강택 외 | 12,500원 |
|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 박형중 외 | 8,000원 |
|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 조한범 외 | 17,500원 |
|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 김규륜 외 | 15,500원 |
|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 김규륜 외 | 10,500원 |
|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 배정호 외 | 15,500원 |
|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 Bae Jung-Ho, Ku Jae H. | 17,500원 |
|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 배정호, 구재희 편 | 16,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 손기웅 외 |
|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 최진욱 외 |
|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 최진욱 외 |
|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 김수암 외 |
|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 박형중 외 |
|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안지호 외 |
|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 박형중 외 |
|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 박영자 외 |
|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 정성철 |
|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 김동수 외 |
|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 조한범 외 |

■ 협동연구총서 ■

| | | |
|---|-------|---------|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 황병덕 외 | 14,000원 |
|---|-------|---------|

| | | | |
|------------|---------------------|-------|--------|
| 2013-26-02 |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박영호 외 | 8,000원 |
| 2013-26-03 |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전병곤 외 | 7,500원 |
| 2013-26-04 |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 이기태 외 | 8,000원 |
| 2013-26-05 |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 조한범 외 | 6,000원 |

■ Study Series ■

| | | | |
|---------|--|-----------------------|--|
| 2013-01 |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e | Lee Kyo Duk et al. | |
| 2013-02 |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Kim Soo Am et al. | |
| 2013-03 |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 Park Jong Chul et al. | |
| 2013-04 |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 Son Gi Woong et al. | |
| 2013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 이금순 외 | |
| 2013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 이금순 외 | |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 2014-01 |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 이교덕 외 | 7,500원 |
| 2014-02 |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 박형중, 박영자 | 7,500원 |
| 2014-03 |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 김석진, 양문수 | 9,000원 |
| 2014-04 |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 성기영 외 | 7,000원 |
| 2014-05 |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순기웅 외 | 6,000원 |
| 2014-06 |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 14,000원 |
| 2014-07 |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 한동호 | 6,000원 |
| 2014-08 |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 이금순, 도경옥 | 8,000원 |
| 2014-09 |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 박영호, 정성철 외 | 11,000원 |
| 2014-10 |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 김규륜 외 | 10,500원 |
| 2014-11 |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 정영태, 홍우택 외 | 12,000원 |
| 2014-12 |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 7,000원 |
| 2014-13 |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 김수암 외 | |
| 2014 |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 최진욱 편저 | 8,000원 |
| 2014 |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 9,000원 |
| 2014 |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 북한인권연구센터 | 11,000원 |
| 2014 |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 9,500원 |
| 2014 | 2014년 통일에측시계 | 박영호, 김형기 | 9,500원 |
| 2014 |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 배정호 외 | 15,500원 |

| | | | |
|------|---|------------------------------|---------|
| 2014 |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 Bae, Jung-Ho et al. | 18,000원 |
| 2014 |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 Kyuryoon Kim et al. | 19,000원 |
| 2014 |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 Kyuryoon Kim et al. | 15,500원 |
| 2014 |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 김규륜 외 | 4,500원 |
| 2014 |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 12,000원 |
| 2014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 조정아 외 | 7,000원 |
| 2014 |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 조정아 외 | 22,000원 |
| 2014 |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 허문영 외 | 12,000원 |
| 2014 |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 박종철 외 | 11,000원 |
| 2014 |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 손기웅 외 |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14-01 |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 임강택, 권태진 |
|---------|-------------------------------|----------|

■ Study Series ■

| | | |
|---------|---|-------------------------------|
| 2014-01 |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 Kim, Kyuroon et al. |
| 2014-02 |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 Bae, Jung-Ho et al. |
| 2014-03 |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 Cho, Jeong-ah et al. |
| 2014-04 |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Lee, Kihyun et al. |
| 2014-05 |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 2014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 이금순 외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 | | |
|---------|---|-------|---------|
| 2015-01 |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 김갑식 외 | 9,000원 |
| 2015-02 |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 홍민 | 13,000원 |
| 2015-03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 조정아 외 | 13,500원 |
| 2015-04 |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 박종철 외 | 16,500원 |
| 2015-05 |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 현승수 외 | 8,000원 |

| | | | |
|---------|--|------------|---------|
| 2015-06 |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 박영자 외 | 10,500원 |
| 2015-08 |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 한동호 외 | 6,500원 |
| 2015-09 |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 이기현 외 | 7,500원 |
| 2015-10 |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 박형중 외 | 16,500원 |
| 2015 |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 손기웅 외 | 10,500원 |
| 2015 | 2015년 통일에측시계 | 홍석훈 외 | 10,000원 |
| 2015 |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 김수암 외 | 15,500원 |
| 2015 |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 10,000원 |
| 2015 |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 이규창 외 | 8,000원 |
| 2015 |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 김진하 외 | 9,000원 |
| 2015 |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 박종철 외 | 10,000원 |
| 2015 |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 김석진 외 | 8,000원 |
| 2015 |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 조한범 외 | 11,500원 |
| 2015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 조한범 외 | 14,000원 |
| 2015 |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 전병균 외 | 10,000원 |
| 2015 |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 배종렬 외 | 13,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 2015-01 |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 박영자 외 |
|---------|-----------------------|-------|

■ Study Series ■

| | | |
|---------|---|----------------------|
| 2015-01 |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 Park, Young-Ho |
| 2015-02 |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 Kim, Suk-Jin |
| 2015-03 |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 Cho, Jeong-ah et al. |
| 2015-04 |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13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 7,000원 |
| 2014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 6,000원 |
| 2015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 8,000원 |

논문

| | |
|--|---------|
|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 10,000원 |

| | |
|--|---------|
|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 10,000원 |

학술회의총서

| | |
|------------------------------|---------|
|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 20,000원 |
|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 19,000원 |

기 타

| | |
|---------------------|---------|
| 2014 북핵일지 1965~2014 |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 | | | |
|-------------------------------|---------------------------------|-----|-----|
|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 | 소속* | |
| 간행물* 받을 주소 |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 | |
| 연락처* | TEL | | 이메일 |
| 이메일 서비스 | 수신 () 수신거부 () | | |
| 회원구분* |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 |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성명 (인) |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www.kinu.or.kr

